

NGO SERIES #03



참여연대 재벌개혁론 비판

박종찬

(자유기업원 NGO 실장)

발 간 사

불과 10여년 전만 하더라도 NGO라는 용어는 일반인들에게 생소한 것이었지만 지금은 익숙한 것이 되었으며 이들의 정치적, 사회적 영향력은 부작용을 걱정해야 할 만큼 날로 커지고 있다. NGO의 숫자도 급속하게 늘어나서 정부에 등록된 숫자만 해도 3,800여개가 넘고 있다. 언론에서는 NGO 섹션을 따로 만들어 보도하고 있으며 정부에서는 이들을 지원하는 법률(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을 제정하였다. 학계에서도 ‘비영리학회’, ‘NGO학회’ 등 NGO 관련 연구그룹이 활발하게 조직되고 있다.

시민사회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평가를 받고 있던 한국에서 불과 10여년 사이에 NGO가 급성장한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NGO의 급성장은 한국사회의 강한 활력과 힘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지금까지는 이러한 에너지가 NGO의 양적 팽창에 활용되었지만 이제는 질적인 성숙을 위해 활용되어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고 하겠다.

NGO의 질적 성숙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 학계의 노력이다. 최근 들어 NGO 관련 연구서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그 결과가 만족스러운 것 같지는 않다. 한국의 NGO 현상을 분석하는 이론적 틀이 확립되지 못한 상태에서 NGO에 대한 기대와 희망이 선언적으로 서술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이다. 이런 현상은 NGO의 발전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 하나의 현상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학문적 차원에서 찬반 양론이 경쟁하는 가운데 정교한 이론적 틀이 마련되어야 한다.

자유기업원에서는 한국의 NGO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면서 그것의 장단점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NGO 시리즈」를 발간하게 되었다. 양적으로 급팽창한 NGO의 활동에서 보여지는 문제점들을 비판하는 한편 살려나가야 할 장점들을 옹호함으로써 NGO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 시리즈가 NGO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학자, 언론인, 일반인들에게 토론의 소재를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2002년 6월

자유기업원장 민병균

훑어보기

이 논문은 최근 들어 한국 사회에서 중요한 행위자로 등장한 시민단체의 이데올로기를 살펴보고자 하는 목적에서 작성되었다. 시민단체의 이데올로기는 다양한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 이 논문에서는 우리나라의 대표적 시민단체 중 하나인 참여연대의 재벌개혁론이 가지고 있는 이데올로기성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연구문제로 “참여연대의 이데올로기는 무엇인가”를 설정했다.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두 개의 논지(가설)를 설정했다. 첫째, 참여연대의 재벌개혁론은 반(反)자본주의 성향을 보여준다. 둘째, 참여연대 재벌개혁론이 갖는 반자본주의 성향은 이데올로기적 성격을 갖는다.

가설을 증명하기 위해서 먼저 이데올로기와 관련된 이론을 검토하였는데, 여기서는 이데올로기의 개념을 정리하고 그것이 갖는 양가성(ambivalence)을 살펴보았다. 첫째, 이데올로기는 계급이익을 추구하는 신념체계로서 은폐와 대체의 기능을 수행하는 허위의식이며 강력한 행동지향성을 갖는다. 둘째, 이데올로기는 왜곡된 인식체계라는 점에서 부정적 인식의 대상이 되었으나 기능주의적 입장에서는 이데올로기가 인간으로 하여금 결단하고 행동을 할 수 있도록 해 준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기도 한다. 그러나 필자는 모든 행동이 옳은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기능주의의 이데올로기에 대한 긍정론에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였다.

본격적으로 참여연대의 재벌개혁론이 갖는 반자본주의 성향과 그것의 이데올로기성을 밝히기 위해서 참여연대가 재벌개혁과 관련하여 발간한 단행본과 참여연대 홈페이지 자료들을 도서관 서베이 방법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이 논문에서 설정한 가설이 증명되었다.

참여연대의 재벌개혁론이 갖는 반자본주의 성향을 증명하기 위해서 먼저 자본주의의 세 가지 기본원칙을 제시했는데, 그것은 소유권 인정, 시장경제 채택, 사적 이윤추구 인정이었다. 참여연대의 재벌개혁론은 첫째, 재벌총수의 소유권을 침해하고 있으며 재벌개혁론이 기반하고 있는 참여민주주의 역시 소유권 침해를 포함하고 있었다. 둘째, 참여연대는 재벌개혁의 수단으로 시장주의적 해법을 사용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으며, 사회적 연대와 같은 시장경제와 상충되는 원리를 시장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었다. 셋째, 참여연대는 재벌총수를 포함해서 가진 자의 이윤추구에 대해서는 비록 그것이 정당한 방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반대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으며 못가진 자의 이윤추구에 대해서는 특혜를 주어서라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었다.

이러한 반자본주의적 재벌개혁론은 이데올로기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참여연대는 사회를 재벌·노동자, 재벌·중소기업, 재벌·소비자와 같은 계급으로 구분하고 난 뒤 ‘못가진 자’의 계급이익을 옹호하고 있었다. 둘째, 참여연대는 자신의 계급이익 추구를 사회정의와 공익 추구라는 보편적 가치로 위장하고 있고 소액주주운동의 경우 표면적으로는 기업경영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인다고 하면서도 내부에서는 계급투쟁의 일환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재벌이 경제위기의 원인 제공자라고 주장하여 인과관계를 전도시키고 있었다. 셋째, 참여연대는 재벌개혁을 위해 다양한 수단과 강력한 열의를 동원하여 직접 행동에 나서고 있었다.

이상의 분석을 통해 참여연대 재벌개혁론은 반자본주의적이며 이데올로기성을 갖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이데올로기성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은 참여연대가 재벌문제와 관련하여 인식상의 오류를 보임으로써 이율배반적 자세를 취하고 있다는 것과 자신만이 옳고 자신을 비판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격렬하게 공격하는 편협성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었다. 모든 인간의 사유체계는 이데올로기적이라는 칼 만하임의 통찰을 생각할 때, 이데올로기 비판의 바른 자세는 이데올로기간의 자유로운 논쟁을 허용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목차

발간사	2
훑어보기	3
I. 서론	6
1. 문제의 제기	6
2. 연구목적과 범위	8
3. 기존 연구의 검토	10
4. 연구문제와 논지(論旨)의 서술	12
II. 이데올로기의 개념과 양가성	14
1. 이데올로기의 개념	14
2. 이데올로기의 양가성(Ambivalence)	15
III. 참여연대의 재벌개혁론과 이데올로기	19
1. 자본주의의 기본원칙	19
2. 참여연대의 재벌개혁론과 반(反)자본주의	20
3. 참여연대 재벌개혁론의 이데올로기성	31
IV. 참여연대 이데올로기 비판	40
V. 요약 및 결론	43
참고문헌	45

I. 서론

1. 문제의 제기

최근 몇 년 동안 우리 사회에서 크게 주목받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바로 시민운동이다. 참여연대에 의해 추진된 소액주주운동이 적지 않은 사람들에게 호응을 받았다. 2000년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벌어진 총선시민연대의 낙천·낙선운동은 정치개혁을 바라는 일반 국민들로부터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개혁을 바라는 국민들에게 시민단체와 시민운동은 희망의 메시지로 읽혀지는 듯하다.

반면 시민단체에 대한 실망과 비난 여론도 만만치 않게 나타나고 있다. 대한부인회의 뇌물수수 사건과 총선연대의 대변인을 맡았던 장원 교수의 성추행 사건 등으로 인해 도덕성을 생명으로 여기는 시민단체의 위상이 타격을 입었다. 얼마 전에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공기업에게 거액의 후원금을 요구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경실련에 대한 비난은 물론 시민운동 자체에 대한 곱지 않은 시선이 표면화되기도 했다.

오늘날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시민단체가 한국 사회에서 중요한 행위자로 등장한 것만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더욱이 시장경제의 세계화가 확대되고 국민국가의 역할이 줄어드는 추세 속에서 국제적, 지역적 시민사회단체들의 활동이 강화될 수밖에 없으며 실제로 그렇게 되어 가고 있다는 관찰로부터 21세기를 NGO(Non-Governmental Organization)의 시대로 규정하는 학자들도 있다.

그러나 시민단체의 구체적인 활동을 살펴보면 적지 않은 문제점과 혼란이 나타나고 있는 것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시민단체와 시민운동은 완성되고 성숙한 어떤 것이 아니라 지난한 논쟁을 거쳐 성숙되어 나가야만 할 것이다. 시민운동이 성숙해 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 시민단체와 시민운동을 연구하는 연구자들의 노력이다.

최근 우리 학계에서 NGO 관련 연구서들을 활발하게 내놓고 있지만 대부분의 연구들은 시민운동의 긍정적인 기능만을 논하고 이를 이론적으로 뒷받침하는 역할에 중점을 두고 있다.¹⁾ 시민운동을 냉정한 시각으로 바라보고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는 연구결과를 찾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이렇게 돼서는 시민운동이 제대로 발전할 수 없다.

1) 신을, “한국 시민운동의 개념적 위상과 문제점”, 『한국정치학회보』, 제35집 2호, p.160.(서울: 한국정치학회, 2001); 유석춘·김용민, “한국 시민단체의 목적전치: 경실련과 참여연대를 중심으로”, 『동서연구』, 제12권 제2호, p.6.(서울: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원, 2000). 신을 교수는 학계에서 이러한 분위기가 형성된 이유를 민주화 과정에서 사회운동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이었던 데서 찾고 있다. 즉 과거 군사정권 시절, 사회운동 혹은 시민운동으로 대표되는 신사회운동의 역기능에 대한 고찰은 곧바로 친정권적인 시각으로 비취질 수 있었기 때문에 시민운동에 대한 비판적 연구가 활성화되기 힘들었다는 것이다.

학계의 이러한 분위기가 언론과 정부에게도 이어져 사회 전반이 시민운동을 무비판적으로 바라보게 된다면 이것은 일면 ‘NGO 혁명’²⁾으로 보일 수 있을지는 몰라도 다른 한편으로는 시민운동 자신에게 치명적일 수 있다. 왜냐하면 오류를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경실련의 사무총장이었던 이석연이 “시민단체가 무오류의 환상 속에서 자기도취에 빠져있다”고 지적한 것³⁾은 매우 시사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이석연은 얼마 전 퇴임사에서 “진보 및 혁신 세력만이 개혁세력으로서 마치 시민운동의 본류로 인식되고 우리 사회의 다수를 차지하는 온건한 보수세력이 반개혁 세력으로 치부되는 상황이 정당화되어서는 안된다”는 말을 한 바 있다.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진보, 혁신, 보수 등은 모두 이데올로기와 관련된 용어들이다. 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시민단체 중 하나인 경실련의 사무총장이 퇴임사에서 이념문제를 언급해야만 했을까? 이석연의 지적은 우리나라의 주도적 시민단체들이 특정한 이념에 기반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해 주는 것이 아닐까? 우리나라의 시민운동이 1980년대의 이데올로기 운동과 연관이 있음을 생각할 때 이러한 의문은 더욱 강해지지 않을 수 없다.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시민단체의 이념성향을 비판적으로 고찰해 보고자 한다.

2. 연구목적과 범위

우리나라의 대표적 시민단체인 참여연대는 소위 재벌이라고 불리는 대기업집단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부정적인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참여연대는 자신의 활동에 대해서 ‘사회정의와 공익’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라는 명분을 내세운다. 따라서 재벌에 대한 부정적인 캠페인 역시 사회정의와 공익을 달성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며 많은 사람들로부터 주목을 받고 있는 소액주주운동도 ‘소액주주 권익보호와 기업경영 투명성 확보’를 위한 것이라고 한다.⁵⁾ 적지 않은 사람들이 참여연대가 벌이고 있는 재벌개혁운동에 지지를 보내는 것은 이러한 명분에 동의하는 차원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참여연대가 사회운동 차원에서 벌이고 있는 재벌개혁 운동이 과연 과학적인 타당성에 기반하여 추진되고 있는 것인지는 따져봐야 할 문제이다. 왜냐하면 사회운동은 이데올로기와 연관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며, 이데올로기는 본질적으로 과학적 사실이라기보다는 허위의식이기 때문이다.

2) 주성수, 『시민사회와 NGO논쟁』, 서울 : 한양대학교 출판부, 2001, p.17

3) 동아일보, 2001. 6. 16.

4) 한국일보, 2001. 11. 2.

5) 참여연대 홈페이지, <http://peoplepower21.org>

따라서 이 논문의 목적은 시민단체가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있는지, 가지고 있다면 어떤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이 연구를 통하여 시민단체가 어떤 특정한 이데올로기에 입각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그러한 이데올로기에서 파생되는 문제점을 비판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논문은 시민단체들이 가지고 있는 이데올로기를 살펴보기 위한 시론적 작업으로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시민단체라고 할 수 있는 참여연대의 이데올로기를 살펴보고자 한다. 현대 산업사회에서 이데올로기 문제는 생산관계를 둘러싸고 첨예하게 갈등양상을 보였던 바 생산관계에 관한 참여연대의 입장을 중점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참여연대가 가지고 있는 이념성향의 단초를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특히 한국의 생산관계에 있어서 핵심문제라고 할 수 있는 재벌문제에 있어서 참여연대의 입장은 무엇이며, 이것은 어떤 이념에 기반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참여연대의 이데올로기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유용한 작업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참여연대의 활동범위는 매우 다양하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과학 분야에까지 활동분야가 망라되어 있는 것이다. 참여연대의 이데올로기를 총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 모든 분야에서 나타난 이데올로기성을 분석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본 논문은 하나의 시론적 작업으로서 경제문제와 관련하여, 특히 한국 경제에서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재벌문제와 관련하여 참여연대의 이데올로기를 살펴보고자 한다. 참여연대의 재벌개혁론을 체계적으로 소개하고 있는 자료는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가 기획하고 참여사회연구소의 소장인 김대환 교수와 경제분과장인 김균 교수가 공동 편집한 『한국재벌개혁론 - 재벌을 바로잡아야 경제가 산다』(나남출판사)라는 책이다. 이 책이 참여연대 재벌개혁론의 모든 것을 보여준다고는 할 수 없겠으나 참여연대가 지향하는 재벌개혁의 방향을 보여주는 자료로서는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이 책 외에도 참여사회연구소가 편집한 『참여민주주의와 한국 사회』(창과과 비평사)라는 책도 재벌개혁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그리고 참여연대의 홈페이지(<http://peoplepower21.org>)에 게재되어 있는 자료들 중에서 재벌개혁과 관련이 있는 자료들도 분석대상에 포함시킬 것이다.

3. 기존 연구의 검토

이데올로기에 관한 기존 연구 중에서 눈에 띄는 것은 언론매체의 이데올로기 성향을 분석하는 논문들이었다.

장택원은 1980년대 노사관계를 다루는 신문 사설 124개를 분석하여 국내 일간지의 이념적 위상을 검토하였다.⁶⁾ 그는 신문사설의 내용분석을 통해 신문들이 노사관계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강조하는 것이 ‘ 대화와 질서 ’였다는 사실을 보이면서 이것은 ‘절차적 합리성’을 강조하는 이념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 큰 변화가 있었던 1987년 6월 항쟁을 계기로 신문의 이념적 영역에 있어서 자율성이 극대화되었으며, 1988년 이후 신문시장이 자유경쟁체제로 돌입하면서 신문간의 이념적 위상의 폭이 넓어졌다는 점을 들어서 신문의 이념은 불변 고정된 것이 아니라 권력의 조건 및 시장의 조건에 따라 상대적 자율성을 갖는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김사철은 기독교계 신문 3개의 통일 및 북한 관련 기사를 분석하였는데,⁷⁾ 분석결과 한국 사회에 확고한 지배 이데올로기로 고착된 반공 이데올로기가 기독교계 신문에도 반영되어 대체로 북한 관련 보도에 있어서 부정적 태도와 친정부적인 보수적 보도태도를 보여주고 있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고태영은 1999년 서울 지하철 노조 파업 관련 신문보도를 분석하면서 조선일보와 대한매일이 유사한 이데올로기적 지향점을 보여준 반면 한겨레는 이와 상당히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⁸⁾ 조선일보와 대한매일은 공공노조와 일반 시민의 입장을 대립구도로 설정하면서 전체 국민의 이해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것, 파업행위가 사회적 혼란과 경제적 손실을 가져오기 때문에 부당하다는 것, 법질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지켜져야 한다는 것 등을 강조함으로써 지배계급에 유리한 이데올로기적 지향을 보여주고 있다고 한다. 이에 반해 한겨레는 우리 사회에서 노동자계급과 지배계급의 갈등이 존재하며 IMF 경제위기 이후 노동자 계급의 고통이 심화되었으므로 무조건 파업을 비난하는 것은 불합리한 일이며 일반 시민도 같은 노동자로서 대승적인 견지에서 파업을 평가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임으로써 피지배계급의 이해관계를 수용한 이데올로기적 지향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NGO의 이데올로기에 관한 연구로는 한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민간환경운동단체의 이데올로기를 분석한 이상헌의 논문이 있다.⁹⁾ 그는 알튀세(Louis Althusser)의 이데올로기

6) 장택원, “정치, 경제적 변동에 따른 신문의 이념적 위상의 변화에 대한 연구 - 1980년대 노사관계 신문사설을 중심으로”, 서강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0.

7) 김사철, “기독교계 신문에 나타난 반공 이데올로기 - 통일-북한 관련 기사를 중심으로”, 서강대학교 언론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4.

8) 고태영, “노동자 파업 관련 언론보도에 나타난 이데올로기 분석 - 1999년 서울 지하철 노조 파업관련 신문보도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9.

론과 페쉴(Michel Pecheux)의 담론이론을 기반으로 환경운동의 이데올로기 분석틀을 제시한 뒤 한국의 민간환경운동단체 14개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우리나라의 환경운동은 기존의 성장 제일주의 이데올로기의 재생산을 가로막고, 하나의 대항이데올로기를 형성하는 인지적 실천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이상에서 열거한 논문들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사실은 이데올로기를 지배계급의 이익을 옹호하는 기제, 다시 말해서 기존의 지배관계를 재생산하는 기제로 파악하면서 이를 비판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논지는 마르크스가 주장한 바 이데올로기는 지배계급의 이익을 옹호하는 허위의식이라는 관점을 따르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논지가 이렇게 된 이유는 이들 논문이 기반하고 있는 이론이 그람시, 알튀세 류의 신마르크시즘에 입각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NGO에 관한 기존의 연구들은 NGO의 활동을 옹호하고 이것을 이론적으로 뒷받침하려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NGO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는 유석춘과 신울의 논문을 들 수 있다.

유석춘은 한국 시민단체가 가진 가장 근본적인 문제점은 ‘시민없는 시민단체’라는 사실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된 원인을 시민단체 활동의 목적전치(goal-displacement)에서 찾고 있다.¹⁰⁾ 즉 시민단체가 본래 설정한 목적의 달성을 위한 활동보다는 조직 자체의 존립·유지에 더 치중하고 시민단체의 지도자나 상근자들이 자신의 개인적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시민단체를 활용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시민단체들이 선단식 조직구조를 구축함에 따라 재정적 취약성의 문제가 나타나게 되었으며 이것을 정부의 지원으로 해결하는 과정에서 독립성과 자율성이 훼손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한다. 뿐만 아니라 시민단체의 지도자들이 정치권에 참여함으로써 시민운동의 순수성이 의심받고 있으며 상근자들 역시 관료화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이러한 목적전치의 결과 시민단체의 지배구조가 과두제적으로 변질되어 시민들의 시민단체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시민단체의 내부민주화와 자율성을 증진하고 리더십과 전문성을 제고(提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신울은 좀더 본질적인 차원에서 시민단체를 비판한다.¹¹⁾ 그는 사회운동과 신사회운동을 비교하면서 조직적 측면과 역할 및 활동 측면에서 한국의 시민운동은 신사회운동적 성격이 결여되어 있다는 사실을 밝혀내고, “한국의 시민운동이 진정한 의미의 시민운동인가”라는 개념적 위상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신사회운동은 사회운동에 비해 조직적 측면이 미약하며

9) 이상현, “한국 환경운동의 이데올로기와 주제에 관한 연구 - 민간환경운동단체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3.

10) 유석춘·김용민, *op. cit.*

11) 신울, *op. cit.*

관료적 요소가 상대적으로 배제되어 있는데, 한국의 시민운동은 방대한 조직과 관료화의 경향을 보이고 있어서 신사회운동보다는 사회운동에 가까운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역할과 사업 측면에서 신사회운동은 지도자의 역할이 비교적 적고 지역에 기반을 둔 소규모적 성격이 강한데, 한국의 시민운동은 명망가를 중심으로 광역화된 사업영역을 구축하고 있어서 이 역시 신사회운동과는 확연히 거리가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운동보다도 분화가 안된 기형적 형태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유석춘과 신윤의 비판은 주로 시민단체의 조직과 활동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에 천착하고 있다. 한 가지 아쉬운 것은 두 논문에서 시민단체의 이데올로기 문제를 좀더 깊게 살펴보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필자는 시민단체의 목적이 변질되거나 사회운동적 특성을 강하게 보이고 있는 이유가 근본적으로 이데올로기 문제에서 기인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질문을 던지면서 이에 답하는 하나의 시론적 작업으로서 이 논문을 작성하고자 한다. 오늘날 한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시민운동의 뿌리가 1980년대 민중운동과 연관이 있음을 생각할 때¹²⁾ 이 연구는 상당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4. 연구문제와 논지(論旨)의 서술

시민단체의 이념성향을 본격적으로 연구하기 위해서는 조사연구(survey research)나 내용분석(content analysis)이 적합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이 논문은 시론적 연구로서 도서관 서베이(library survey) 방법을 사용하고자 한다. 시민단체 중에서 대표적인 단체라고 할 수 있는 참여연대의 이념성향을 고찰함으로써, 다수의 시민단체들이 가지고 있는 이념성향에 관한 과학적 연구를 위한 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도서관 서베이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다.¹³⁾ 첫째, 현재의 상태를 있는 그대로 알고 해석을 내리는 것이다. 둘째, 현상을 알고 그것을 과거와 비교하려는 것이다. 셋째, 현상을 파악하고 그것을 비평하는 것이다. 넷째, 방향을 제시하는 것, 즉 제언을 하는 것이다. 이 중에서 첫 번째와 세 번째가 이 연구의 주요 목표이다. 참여연대의 이념성향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이에 대한 비평을 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것을 위해 필자는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한다.

12) 참여연대의 경우 80년대 재야민중운동의 전통을 이어 새로운 시민운동의 모형을 만들기 위해 창립되었다고 한다. 김영래·김혁래(1999), “한국 비정부조직(NGO)의 현황과 과제”, 국회학술회의 「한국사회에서 국회와 NGO의 역할」 발표 논문.

13) 차배근, 『사회과학연구방법』, 서울 : 세영사, 1994, pp.314-315.

연구문제 : 참여연대의 이데올로기는 무엇인가.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논지(가설)를 설정한다.

논지 1 : 참여연대의 재벌개혁론은 반(反)자본주의 성향을 보여준다.

논지 2 : 참여연대의 반자본주의 성향은 이데올로기적 성격을 갖는다.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될 것이다. 먼저 이데올로기와 관련된 이론을 검토할 것이다. 여기서는 먼저 이데올로기의 개념을 정립한 후 이데올로기가 가지고 있는 양가성을 살펴볼 것이다. 이론적인 배경을 살펴본 후 본격적으로 참여연대의 재벌개혁론을 분석할 것이다. 여기서는 먼저 참여연대의 재벌개혁론이 가지고 있는 반자본주의적 특성을 분석한 뒤 그것이 가지고 있는 이데올로기적 성격을 밝혀낼 것이다. 결론 부분에서는 참여연대의 재벌개혁론이 가지고 있는 이데올로기성에서 파생되는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글을 맺을 것이다.

II. 이데올로기의 개념과 양가성

1. 이데올로기의 개념

현대 사회에 있어서 이데올로기라는 용어는 매우 흔하게 사용되고 있다. 사람들 각자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 또는 사람들의 의식과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신념체계가 이데올로기라는 것이다.¹⁴⁾ 이데올로기를 이렇게 이해하게 되면서 이데올로기적이 아닌 것을 찾기 힘들 정도가 되었다. 즉 과학을 포함해서 모든 것이 이데올로기로 이해되면서 이데올로기 개념의 인플레 현상이 극심하게 되었고 그 결과 과학적 분석의 대상으로서 이데올로기 개념이 무용해지게 되었다. 한상진은 이와 같은 이데올로기 개념의 남발을 비판하면서 모든 의식이 이데올로기적이라고 할 수는 없으며 이데올로기적인 것은 그 중의 일부로 국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¹⁵⁾ 그렇다면 이데올로기는 무엇인가?

한상진은 칼 마르크스의 『독일 이데올로기』를 분석하면서 이데올로기의 개념정의를 시도하고 있다.¹⁶⁾ 마르크스는 『독일 이데올로기』에서 당시 독일 지성계의 특징을 이루고 있던 관념철학은 예외 없이 이념의 수준에서 역사를 파악하려고 한다고 지적한다. 즉 의식이나 이념으로부터 출발하여 현실을 이해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의식은 현실을 설명하는 일종의 독립변수라기보다는 그 자체가 설명되어져야 할 종속변수와 같은 것이다. 왜냐하면 의식은 사회적 산물로서 그것을 발생시킨 구체적인 사회의 계급관계 밖에 초월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 엮여 기능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져야만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마르크스는 따라서 의식이 인간실천을 통해 사회적 산물로서 어떻게 형성되고 기능하는가를 전혀 보지 못한 채, 의식 안에서 사물의 본질을 찾으려는 일체의 시도를 헛된 것으로 간주한다.

그러나 모든 의식이 사회적으로 규정된 것이라고 해서 이러한 의식이 자동적으로 이데올로기가 되는 것은 아니다. 어떤 의식이 이데올로기적이기 위해서는 계급과 관련성을 가져야 한다. 즉 이데올로기란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계급이익을 대변하고 이것에 봉사하는 것으로 규정될 수 있는 것이다.

이데올로기가 계급이익을 반영한다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못하다. 여기에 더해서 이데올로기는 중요한 특징을 갖는데, 그것이 바로 은폐와 대체의 기능이다. 은폐와 대체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으로서, 은폐는 현실적인 모순이나 진정한 행위의 동기 혹은 지배관계를 숨기는 것을 의미하고 대체는 이로써 생긴 빈 공간을 그럴 듯한 다른 요소로 메꾸는 것을 의미한

14) 라이만 T. 사전트, 정연식 역, 『현대정치 이데올로기』, 서울 : 이문출판사, 1986, pp.9-11.

15) 한상진, “이데올로기 비판이론의 과제”, 서울대학교 현대사상연구회 편, 『이데올로기와 사회변동』, p.154.(서울 : 서울대학교 출판부, 1986)

16) Ibid. p.155.

다. 마르크스는 이런 의미에서 이데올로기를 ‘허위의식’으로 규정하는 것이다.

한상진은 이데올로기가 가진 두 가지의 특징을 요약하면서 이데올로기의 개념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이데올로기는 은폐와 대체의 기능으로 특정 계급의 이익에 봉사하는 의식 혹은 말의 구조라고 정의할 수 있다.”

한편 마르크스는 이데올로기의 속성을 사회적 실천에서 찾고 있다. 즉 이데올로기는 인간의 머리에만 있는 관념적인 것이 아니고 구체적인 실천으로서 사회적 과정에서 능동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의식이 인간의 실천의 결과라면, 의식의 특정한 형태로서 이데올로기 역시 인간의 실천의 결과이기 때문이다.¹⁷⁾ 이런 의미에서 이데올로기는 “사람들이 공유하고 있는 매우 강력한 힘을 지닌 행동지향적인 신념체계”¹⁸⁾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2. 이데올로기의 양가성(Ambivalence)

이론적으로 또는 역사적으로 이데올로기에 대한 평가는 상반된 두 가지 입장을 보여준다. 하나는 ‘허위의식’ 다시 말해 왜곡된 인식으로서 이데올로기를 파악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사회적 실천의 필요성에 입각해 이데올로기의 긍정적 기능을 옹호하는 입장이다.

이데올로기 개념을 처음으로 사용한 사람은 프랑스의 철학자인 트라시(Destutt de Tracy)였다. 그는 긍정적인 의미에서 이데올로기론을 제시하였으나 프랑스 혁명과 나폴레옹의 등장이라는 정치적 상황에 의해 이데올로기의 의미는 부정적인 것으로 변질되었다. 노병철은 이데올로기의 양가성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¹⁹⁾

트라시는 인간은 사실을 사실 그대로는 알 수 없으며 단지 감각을 통해 형성된 이념들만을 알 수 있다고 생각하여 이러한 감각과 이념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할 수만 있다면 모든 과학적 지식의 확고한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트라시에게 있어서 이데올로기는 감각과 이념에 대한 과학적 검토 즉 이념의 과학(science of ideas)이었던 것이다. 그는 이데올로기가 관찰에 기초하고 편견으로부터 자유로운 이념의 과학이며 교육과 도덕적 질서의 토대가 된다고 하였다.

이데올로기 개념이 처음에 등장할 당시에는 이렇게 긍정적인 의미를 가졌으나 곧바로 정치적인 이유에서 부정적인 이미지가 부여되었다. 원래 트라시의 이데올로기론은 프랑스 혁명의 과정에서 혁명적 변화를 지지하면서 공화제의 원리를 제공하고 정치규범의 목표를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나폴레옹이 등장하면서 이데올로기의 허구를 비웃으며 그

17) *Ibid.*, pp.159-160.

18) 노병철 외, 『현대 사회와 이데올로기』, 서울: 인간사랑, 2001, p.11.

19) *Ibid.*, pp.15-17.

것을 정치적 실체와 유리된 추상적이고 사변적인 교의라고 비난하였고, 트라시와 그 동료들을 형이상학적 도당, 즉 이데올로그(ideologue) 집단이라고 매도하였다. 이데올로기가 정치적인 용어가 되어 나폴레옹에 의해 비난받게 됨으로써 그 개념 자체의 의미와 내용이 변질되기 시작하였던 것이다. 이데올로기는 얼마든지 오류가 있을 수 있으며 정치생활의 실제적인 모습과도 유리된 일단의 이념들을 지칭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해서 긍정적 함의를 지닌 엄밀한 과학으로서 이데올로기가 점차 추상적이고 가공적인 이념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전환됨으로써 조소와 경멸의 대상으로 바뀌게 된 것이다.

이데올로기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나폴레옹에 의해서만 시작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한 인식은 나폴레옹 이전부터 계몽주의자들에 의해서 그 단초가 제공되었다. 봉건사회를 합리화시켜주던 신적 질서를 부정하고 인간 중심의 세계관을 합리적 이성의 영역에서 형상화하려던 계몽주의자들은 지배계층의 특권을 유지시켜 주는 일체의 사고체계 내지 이념체계를 비판하면서 권력과 지위를 유지·존속시키려는 지배계층의 왜곡된 세계관의 허위성을 폭로하는 데 노력을 집중하였다. 물론 계몽주의자들은 지배계층의 세계관을 이데올로기라고 칭하지 않고 단지 사고체계, 사고방식 혹은 내용 정도를 지칭하는 것으로 만족하였다.²⁰⁾ 하지만 이러한 비판의식이 트라시 이후 나타난 이데올로기에 대한 부정적 인식의 단초를 제공했던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데올로기에 대한 비판은 마르크스에 이르러 정점에 이른다. 마르크스는 그의 초기 저서 『독일 이데올로기』에서 포이에르바하, 바우어, 스티르너 등 영헤겔리안들의 견해를 비판하면서 자신의 이데올로기 개념을 정립시키고 있다. 영헤겔리안들은 관념, 사고, 이념 등 의식의 모든 산물들이 독립적으로 존재한다고 보고 이것들이 인간을 실제로 속박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마르크스는 이러한 관념론에 반대하면서 의식은 사회적 산물, 즉 생산관계와 계급관계의 산물이라고 주장한다. 이런 차원에서 이데올로기는 지배계급의 이해관계를 가공된 형태로 표현하는 이념체계로 이해되는 것이다. 이데올로기는 개인들로 하여금 미래보다는 과거를 지향하게 하거나, 계급관계를 은폐하고 집단적인 사회변화의 추구를 방해하는 이미지나 이상을 지향하게 함으로써 현존의 계급지배를 유지하도록 도와주는 표상체계라는 것이다. 결국 이데올로기는 지배계급의 이익에 봉사하는 허위의식에 불과한 것이다.

마르크스가 지배계급의 이해라는 관점에서 이데올로기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확대시켰으나 후대에 이르면서 이데올로기의 긍정적인 측면이 부각되었다. 이러한 긍정론은 대체로 이데올로기가 부정확한 인식을 내포하고 있지만, 그것은 인간의 사유에 있어서 불가피한 것이며 더욱이 인간의 행동을 유발하는데 있어서는 불가결하다는 점에서 제기되고 있다.

칼 만하임(K. Mannheim)은 역사상 모든 사회집단들의 의식은 사회구조의 영향을 받기

20) 송호근, 『지식사회학』, 서울 : 나남출판사, 1992, p.195.

때문에 이데올로기적 성격을 띠지 않을 수 없다고 하면서 마르크스가 제시한 프롤레타리아 계급의식 역시 부르주아 계급의식과 마찬가지로 하나의 이데올로기일 뿐이라고 주장한다.²¹⁾ 따라서 이데올로기 개념은 어떤 유일한 계급만이 향유할 수 있는 사상적 특전일 수는 없다.²²⁾ 다시 말해 만하임은 “이데올로기는 허위의식”이라는 마르크스의 주장에 대해서 “모든 이데올로기는 허위의식”이라는 반론을 제기했던 것이다.²³⁾ 만하임은 사고(이데올로기)의 사회적이고 역사적인 뿌리를 강조하는 지식사회학을 통해서 사회과학에 새로운 유형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정치생활을 과학적으로 인도할 수 있는 가능성에 답할 수 있으리라는 희망을 품었던 것이다.

근대에 이르러 이데올로기에 대한 긍정론이 확산되었는데, 이러한 견해는 이데올로기가 비록 인식적 왜곡을 포함하고 있지만 기능적 측면에서 사회변화를 촉진하는 인간행동을 유발하는데 불가결하다는 점에서 제기되었다.

소렐(Georges Sorel)은 인간이 사회현상을 인식하기 위해 단순한 개념들로 이루어진 인위적 표상을 만들어내는데, 이러한 표상은 사회현상을 특정한 방향으로만 드러내 주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이와 같은 인위적 표상은 신화이며 이것이 이데올로기의 근원이다. 그런데 이러한 인위적 표상, 즉 신화는 현상을 단순화시켜 특정한 방향으로만 드러내기 때문에 인간으로 하여금 결단을 내리고 대담한 행동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다. 소렐은 이데올로기를 신화와 같은 부정적인 개념으로 규정하면서도 그것이 대중들에게 심리적인 동기를 부여해 줌으로써 그들을 집단행동으로 동원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봄으로써 이데올로기의 필연성과 긍정적인 의의를 함께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파레토(Vilfredo Pareto)는 인간은 타고난 논리적 본성과 이성적인 기능을 토대로 감정과 충동에 따른 자신의 결단과 행동을 합리화할 수 있는 구실을 찾고자 한다고 한다. 이렇게 비합리적인 충동이나 감정을 가리기 위해 이것을 정당화하고 영속화시키는 것이 바로 이데올로기이다. 그러나 파레토는 이데올로기가 인간들에게 감정과 충동에 근거한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 준다는 점에서 그것의 현실적 필요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파슨스(T. Parsons)는 이데올로기를 기능적 측면에서 파악하고 있는데, 사회의 현상유지, 결속, 그리고 개혁을 위한 사회적 기능을 발휘하는 것이 바로 이데올로기라는 것이다. 램베르크(Eugen Lemberg) 역시 기능주의적 차원에서 이데올로기의 기능을 역설하고 있다. 사회구성원들을 효과적으로 통합하고 모든 구성원들이 하나의 목표를 지향하도록 단결시키기 위해서는 이데올로기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21) 마르크스의 변증법적 유물론은 프롤레타리아의 계급의식이 진정한 역사적 주체라고 정당화하고 있기 때문에 프롤레타리아의 계급의식은 이데올로기가 아니었고 따라서 허위의식도 아니었다(송호근, *op. cit.*, p.211.).

22) K. 만하임, 임석진 역, 『이데올로기와 유토피아』, 서울 : 청아출판사, 2000, pp.118-124.

23) 송호근, *op. cit.*, p.204.

이상에서 노병철의 설명을 중심으로 이데올로기의 양가성을 살펴보았다. 이데올로기는 왜곡된 인식이라는 점에서 부정적인 의미로 비춰지지만 한편으로 인간의 인식은 불가피하게 이데올로기적일 수밖에 없으며, 그것이 인간의 행동을 유발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기도 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필자는 이데올로기의 긍정적인 기능을 기능주의 차원에서 찾는 시각에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기능주의는 인간의 행동, 특히 사회의 개혁(변혁)을 지향하는 인간의 행동은 선하다는 가정을 전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역사적으로 명백하듯이 인간의 행동이 무조건 옳은 것은 아니었다. 계몽주의에 입각한 인간의 행동은 봉건사회를 타파하고 근대 시민사회를 형성하는데 크게 공헌했고 자유주의에 기반한 자본주의는 인류의 경제적 번영을 가능케 했다. 그러나 파시즘에 입각한 인간의 행동은 전쟁과 고통을 양산했을 뿐이다. 사회주의 이념에 입각한 인간행동은 대실패를 가져왔다. 이데올로기가 인식상의 왜곡을 포함하면서도 행동을 유발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는 것은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보여준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보아야 할 것이 아니라 부정적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만하임의 지적처럼 이데올로기가 인간의 사유에서 불가피한 것이라면²⁴⁾ 인간이 만들어낸 다양한 이데올로기를 합리적으로 비판해 나가는 일이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이데올로기 비판은 이데올로기의 허구성을 밝혀냄으로써 그것이 가져올 수 있는 비극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일 것이다. 다음 장에서 본격적으로 이뤄질 참여연대의 이데올로기 분석도 바로 이런 차원에서 의의를 갖는다고 하겠다.

24) K. 만하임, *op. cit.*

III. 참여연대의 재벌개혁론과 이데올로기

이 장(章)에서는 참여연대가 자본주의에 관해서 가지고 있는 인식을 살펴보고 그러한 인식이 가지고 있는 이데올로기성을 증명해 보고자 한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자본주의의 주요 원칙을 제시하고 참여연대의 재벌개혁론이 자본주의의 원칙과 상충되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나서 참여연대의 재벌개혁론이 가지고 있는 이데올로기성을 밝힐 것이다.

1. 자본주의의 기본원칙

자유주의의 경제적 측면이 자본주의이다. 따라서 자유주의를 구성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 가운데서 경제적 측면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자본주의의 원칙을 구성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요소는 매우 많을 뿐만 아니라 국가별로 자본주의의 양태가 다양하기 때문에 자본주의의 원칙을 완벽하게 제시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자본주의가 유지되기 위한 최소한의 기본적인 원칙을 제시하는 것은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노병철은 근대 자본주의의 특성으로 다음의 세 가지를 들고 있다.²⁵⁾

첫째, 개인의 소유권을 인정한다는 것이다. 자본주의에 있어서 가장 큰 특성은 생산수단을 포함해서 재산을 개인이 소유할 수 있다는 점이다.²⁶⁾ 자본주의가 사적인 소유를 강조하는 것은 자유주의 사상에 토대를 두고 있다. 자유주의에서는 인간의 자유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소유는 필수 불가결하다고 본다. 하이에크는 사적 소유를 단순히 인간의 번영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로서뿐만 아니라 도덕, 더 나아가서 정의(justice)를 가능하게 하는 제도적 토대로 간주하면서 “소유가 없는 곳에는 정의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다.²⁷⁾ 이와 같이 자본주의에서 개인 소유권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침해될 수 없는 기본적인 권리로 인정되는 것이다.

둘째, 자본주의는 시장경제를 채택하고 있다. 물론 자본주의 이전 단계에서도 시장의 기능이 존재하기는 했지만, 그것은 대개 지역적이고 자급자족적 형태인 원시적 지역시장에 불과하였다. 이에 비해 자본주의는 노동분화에 기초한 시장경제, 즉 자유시장경제에 기초하고 있다. 자유시장경제는 개인이나 기업이 자신들의 이해관계, 경험, 능력에 맞춰 자기 스스로 경제적 결정을 내리고 이러한 결정들은 경쟁을 통해 ‘보이지 않는 손’, 즉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 작동되도록 한다. 시장경제에 대한 외부의 간섭은 시장경제의 원활한 작동을 방해하는 것으로서 최소화되어야 하며, 이런 차원에서 정부는 시장에 가능한 한 개입을 적게 하는 것

25) 노병철 외, *op. cit.*, pp.211-214.

26) 물론 시장실패가 발생하는 공공재의 경우 생산수단의 공적 소유를 인정한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예외적인 것이며, 자본주의는 사적 소유를 원칙으로 한다.

27) F. A. 하이에크, 신증섭 역, 『치명적 자만』, 제2장, 서울 : 자유기업원, 1996

이 좋다.

셋째, 자본주의에서는 사적 이윤추구를 옹호한다. 개인적 이익을 추구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에 해당되는데, 자본주의에서 사적 이윤추구를 인정하는 것은 이러한 인간의 본성을 존중하는 차원을 넘어서 사적 이윤추구가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온다는 확신에 입각한 것이다. 즉 개인이 자기 자신의 이윤을 추구하는 것은 동시에 모든 사람들의 이윤추구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아담 스미스의 푸주간 주인 이야기는 사적인 이윤추구가 어떻게 해서 사회적인 협동을 가져오는지를 보여주는 유명한 예화이다. 사적 이윤추구의 긍정은 자연스럽게 기업가나 자본가가 축적한 부(wealth)에 대한 긍정론으로 이어지는데, 미제스는 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진정한 자유주의 원칙에 따라 조직된 사회에서는 기업가와 자본가가 부자가 될 수 있는 길은 단 하나, 즉 그의 동료들이 원한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보다 더 잘 제공해 주는 길밖에 없다.”²⁸⁾

이상을 통해서 자본주의가 가지고 있는 최소한의 기본원칙이라고 생각되는 것을 살펴보았다. 물론 자본주의가 가진 최소한의 원칙이라고 해서 신성불가침한 것은 아니며 법률에 의한 제약이 가능하다. 그러나 법률이 아닌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더 나아가 이데올로기에 입각해서 이러한 원칙을 훼손하고자 한다면 이는 분명히 반(反)자본주의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전제하에 참여연대의 재벌개혁론을 살펴보기로 한다.

2. 참여연대의 재벌개혁론과 반(反)자본주의

(1) 재벌에 대한 인식

참여연대의 재벌에 대한 인식은 매우 부정적이다. 재벌은 경제력집중을 통해 시장효율을 파괴하고 있으며 집권세력과 결탁하여 민주화를 가로막았을 뿐만 아니라 언론을 지배하고 통제하여 저급한 상업문화를 유포함으로써 사회문화를 오염시키고 있다는 것이다.²⁹⁾

재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재벌의 성장과정에 대한 해석에서부터 나타난다.³⁰⁾ 1950년대 재벌은 생산과정이 아닌 유통과정에서 부를 축적하였다는 점에서 상인자본에 가까웠는데, 당시 부를 축적한 원천은 이승만 정부에 의해 극단적으로 저평가 된 환율로 인한 환율차

28) 루드비히 폰 미제스, 이지순 역, 『자유주의』, 서울: 자유기업원, 1997, p.45.

29) 김대환a, “재벌문제의 인식과 재벌개혁의 방향”, 참여연대 참여사회연구소 기획, 김대환-김균 공편, 『한국재벌개혁론』, 서장(序章), 서울: 나남출판사, 1999

30) 이재희, “재벌과 국민경제”, 참여연대 참여사회연구소 기획, 김대환-김균 공편, 『한국재벌개혁론』, 서울: 나남출판사, 1999, pp.40-44.

익이었다고 한다. 1960~1970년대를 거치면서 한국 재벌은 근대적 의미의 산업자본으로 변모하였고, 이 시기 재벌의 성장원천은 저임금 노동자에 대한 착취였다고 한다. 1980년대 이후 한국의 재벌은 독점자본으로 성장하였는데, 1970년대까지 재벌의 축적 원천은 생산과정에서의 저임금 노동력 이용에 한정되었으나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이와 더불어 유통과정에서 소비자와 중소기업에 대한 독점적 지배가 추가적인 축적 원천으로 등장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렇듯 재벌이 축적한 부는 특혜, 착취, 독점과 같은 부정적인 방법을 통해서 이뤄졌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한편 재벌과 정치권력은 긴밀하게 결합되어 공생관계를 유지해 왔다고 한다. 재벌은 전경련을 통해 자신의 공동이익을 결집하고 이를 관철시키기 위해 고위관료들과 공식모임, 로비활동, 정치자금 제공 등 각종 수단을 통해 정치권력과 제도적으로 유착해 왔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재벌의 관리자층은 정부부처 관료층과 출신지역이나 출신학교 등을 통해 연결되어 있고 재벌과 정치권력은 통혼(通婚)관계를 통해서 인적 결합을 공고히 하고 있다고 한다.

한편 재벌은 생산과정에서 중소기업을 하청기업으로 활용함으로써 비용을 절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유통과정에서 중소기업을 독점적으로 지배함으로써 중소기업의 부를 이전 받아 독과점적 초과이윤을 취득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소비자에 대해서도 재벌은 국내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소비자에 대한 시장지배의 결과 막대한 초과이윤을 획득하고 있다고 한다.³¹⁾

이런 식으로 성장한 재벌은 생산요소를 독점하여 자원배분의 비효율까지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한다.³²⁾ 재벌의 영향력이 약했던 성장 초기에는 정부가 경제 전체의 자원배분을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었지만 재벌의 성장으로 정부의 통제력은 약화되고 자원배분을 둘러싼 재벌의 영향력은 한층 강화되었다는 것이다. 재벌에 자금배분이 집중되면서 성장유망 부문이 등장함에도 불구하고 재벌체제로 인해 이 부문으로 자금이 흘러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격차로 인해 노동자들은 재벌기업에 취업하기를 선호하게 되고, 그 결과 중소기업으로서는 고급인력은 물론이고 기능인력조차 확보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재벌의 부당 내부거래로 인해 재벌의 비효율적인 계열사는 살아남지만 효율적인 경쟁 중소기업은 시장에서 도태되고 만다고 한다.

또한 한국의 재벌은 동일인³³⁾과 그 가족에게 소유권과 경영권이 실질적으로 통합되어 있는데, 동일인은 미약한 소유권에도 불구하고 특수관계인과 계열회사로부터의 긴밀한 금전적 협조를 통해 궁극적으로 전 계열회사의 사업내용을 사실상 지배하게 된다는 것이다.³⁴⁾ 이에

31) *Ibid.*, pp.48-62.

32) 홍장표, “재벌과 중소기업”, 참여연대 참여사회연구소 기획, 김대환·김균 공편, 『한국재벌개혁론』, 서울: 나남출판사, 1999, pp.113-121.

33) 동일인이라는 것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나오는 용어로서 여기서는 재벌의 총수를 말한다.

따라 법적으로 주식회사를 움직이는 세 기둥인 주주총회는 ‘통과위원회’, 이사회는 ‘거수기’, 감사는 ‘안으로 굽는 팔’에 불과하다고 한다. ‘그룹회장 - 실무 실세지배기구 - 각 계열사’로 이어지는 한국 재벌의 경영조직은 형식상으로는 가장 진전된 서구식 경영구조로 불리는 M-form(decen- tralized, multidivisional structure)을 닮으면서도 실질적으로는 서구 산업화 초기의 경영구조인 P-form(personal form)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재벌은 언론을 지배하고 통제함으로써 각종 피해를 낳고 있다고 주장한다.³⁵⁾ 재벌이 언론을 직접 소유하거나 광고주로서 언론을 통제함으로써 불공정거래의 피해가 나타나고 있고 정보의 왜곡과 편중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서울 중심의 시각이 전파되면서 상업주의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재벌의 언론지배는 저급한 상업문화를 낳고 있으며 이에 의해 사회문화가 오염되고 있다고 주장한다.³⁶⁾

이상에서 알 수 있듯이 참여연대의 재벌인식은 지극히 부정적이어서 한국 사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부조리의 핵심원인이 바로 재벌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듯하다. 이러한 인식 중에는 타당한 근거를 가지고 있는 것도 있지만 과장되고 왜곡된 측면이 있을 뿐 아니라 실증적 근거가 부족하거나 논리적 비약이 나타나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³⁷⁾

(2) 소유권과 재벌개혁

소유는 자유의 전제가 되는 것으로서 자유주의의 핵심원리이며, 이것은 자유주의의 경제적 표현인 자본주의에서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자본주의에서 소유권을 인정한다는 것은 명목상으로 개인소유를 선언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그것은 소유자의 실질적인 사용권과 처분권을 인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러한 사용권과 처분권을 제한하려 한다면 비소유자가 소유권 행사에 개입하는 것을 옹호하는 것은 소유권에 대한 침해라고 할 수 있다.

참여연대의 재벌개혁론에서 한 가지 확실하게 나타나고 있는 사실은 재벌 총수의 소유권을 제한하는 한편, 총수의 사용권과 처분권에 대한 비소유자의 간섭을 추구하고 있다는 점이다. 참여연대는 재벌체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 중에서 가장 심각한 것이 총수와 그 가족에 의한 소유와 경영(지배)의 독점과 이러한 독점의 대를 이은 세습이라고 주장한다.³⁸⁾ 소유

34) 김동운, “한국재벌의 지배구조”, 참여연대 참여사회연구소 기획, 김대환·김균 공편, 『한국재벌개혁론』, 서울: 나남출판사, 1999, pp.67~80.

35) 최현철, “재벌의 언론지배와 통제”, 참여연대 참여사회연구소 기획, 김대환·김균 공편, 『한국재벌개혁론』, 서울: 나남출판사, 1999, pp.145~159.

36) 김대환a, *op. cit.*, p.24-25.

37) 이 절의 목표는 참여연대의 재벌개혁론에서 나타나는 반자본주의 성향을 보이는 것이므로 재벌인식의 타당성에 대해서 자세히 논하는 것은 생략하고 참여연대의 재벌인식이 지극히 부정적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선에서 그치기로 한다.

38) 김기원, “재벌체제의 지양과 책임 전문경영체제의 구축”, 참여연대 참여사회연구소 기획, 김대환·김균 공편, 『한국재벌개혁론』, 서울: 나남출판사, 1999, pp.199~200.

와 경영이 분리되지 않음으로써 첫째, 총수의 독단적 경영에 의해 무리한 다각화나 과잉투자가 발생하며, 둘째, 총수의 지배권 독점욕에 의해 과도한 차입이 나타나며, 셋째, 억압적이고 온정주의적인 노사관계, 즉 가부장주의를 발생시켜 노사관계의 근대화를 지연시키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총수세습독재체제를 책임전문경영체제로 변화시키는 일이 재벌체제 지양의 핵심이라고 주장한다.

소유권과 관련하여 위의 주장을 검토해 보자. 현재 재벌의 총수가 독단적인 지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근거는 동일인, 특수관계인, 계열사 지분을 동원해서 기업집단 전체를 지배할 수 있는 지분을 확보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총수는 자신의 지분을 확보하고 있으며 그것을 기반으로 기업에 대한 통제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총수의 행위는 자본주의의 소유권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비난하면서 제한하려고 하는 것은 소유권에 대한 침해가 아닐 수 없다.

물론 총수의 지분확보 과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거나, 총수를 제외한 다른 주주들도 회사의 주인이므로 지분에 합당한 권한을 행사해야 하는데 총수의 권한독점으로 권한이 형해화되고 있다는 주장이라면 소유권 원칙과 충돌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참여연대의 주장은 이런 차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다. 참여연대는 주주자본주의(shareholder capitalism)가 아닌 이해관계자 자본주의(stakeholder capitalism)를 요청하고 있다. 주주 외에 종업원, 소비자, 협력업체, 금융기관, 지역주민과 같은 회사의 이해관계자가 회사에 대한 통제력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³⁹⁾ 참여연대가 요구하는 소유와 경영의 분리는 바로 이러한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를 지향하는 차원으로, 책임전문경영인체제라는 것도 단순히 소유와 경영이 분리돼서 전문가가 경영을 맡는 것이 아니다. 전문경영인이 책임을 져야 할 대상에는 주주뿐만 아니라 이해관계자들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 김기원은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 최고 경영진을 감사·견제하고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기업지배구조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 기업지배구조는 주주만이 아니라 모든 이해관계자가 감사·견제하는 민주적인 기업지배구조가 되어야 한다. 즉 단순한 전문경영체제가 아니라 민주적 ‘책임전문경영체제’의 구축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⁴⁰⁾

여기서 말하는 이해관계자들, 구체적으로는 종업원, 소비자, 협력업체, 금융기관, 지역주민은 기업의 소유자가 아니다. 따라서 이들이 회사에 대해서 통제력을 행사해야 한다는 주장은 비소유자가 타인의 소유권의 사용과 처분에 대해서 개입해야 한다는 것이므로, 이는 자본주의의 소유권 원칙에 명백히 위배되는 것이다.⁴¹⁾

39) *Ibid.*, p.187.

40) *Ibid.*, pp.198-199.

한편 참여연대의 재벌개혁론을 살펴보면 ‘민주주의’와 ‘참여’라는 용어가 많이 등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용어는 우연히 사용된 것이 아니라 ‘참여민주주의’를 강조하는 차원에서 사용된 것이다. 실제로 참여연대의 정관을 살펴보면 참여민주주의의 실현은 참여연대의 목표로 되어 있다.⁴²⁾ 소유권과 관련하여 참여민주주의론은 상당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살펴보기로 한다.

김대환은 참여민주주의에서 참여란 “사회의 보통 구성원들이 의사결정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거나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행동”이라고 정의한다.⁴³⁾ 참여는 ‘위로부터 아래로’가 아닌 ‘아래로부터 위로’의 행동을 의미하며 참여의 목적은 ‘의사결정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목적은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사람들 사이에 공유되는 것이라야 한다. 따라서 정치적 목적을 위한 동원(mobilization)이나 개별적 효용극대화를 위한 시장참여는 참여의 범주에서 제외된다. 한편 참여는 다양성을 특징으로 하는데, 여기서 다양성이란 참여자의 구성이 다양하다는 것뿐만 아니라 참여의 대상과 이슈 역시 다양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참여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핵심 고리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작업장민주주의이다. 여기서 말하는 작업장 민주주의는 단순히 작업공정에 노동자들의 의사를 반영하는 정도의 낮은 수준에 국한된 참여가 아니라 더 높은 수준에서의 의사결정에 대한 참여까지도 포함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말하면 노동자의 경영참가를 의미한다.⁴⁴⁾ 김대환은 이러한 참여가 민주주의의 근본이며 ‘진정한’ 민주주의의 척도라고 주장한다.⁴⁵⁾

그런데 김대환이 주장하는 것처럼 ‘참여’가 민주주의 근본이라고 할 수 있는지는 매우 의문스럽다. 존 로크의 사회계약론을 보면 민주주의가 사적 소유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로 고안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즉 정치권리를 가진 각 개인은 재산소유자이며, 국가는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려는 이들에 의해서 권력이 주어졌다. 만약에 국가가(재산을 보호하는)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다면 시민사회의 성원들은 그 국가를 해체하는 권력을 지닌 것이다.⁴⁶⁾ 로크의 사회계약론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근대 민주주의 사상의 근저에 소유권 개념이

41) 여기서 한 가지 반론이 제기될 수 있다. 비소유자가 소유자의 사용과 처분에 개입하는 것이 소유권 원칙에 위배된다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인정되는 정부에 의한 개입 역시 소유권 원칙에 침해된다는 말인가 하는 점이다. 그러나 자본주의에서 정부의 개입이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은 계약에 의한 권리의 양도라는 사회계약론 차원에서의이다. 즉 정부가 개인의 소유권에 개입할 수 있는 근거는 소유자가 그러한 개입을 계약(법률)을 통해서 인정했기 때문이다. 만약 회사의 주주가 노조나 소비자나 같은 이해관계자에게 기업에 대한 통제권을 자발적으로 인정해 준다면 이는 소유권 원칙의 침해가 될 수 없다. 그러나 참여연대가 말하고 있는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는 이러한 동의와 계약의 절차를 배제하고 있다.

42) 참여연대 홈페이지, <http://peoplepower21.org>

43) 김대환b, “참여의 철학과 참여민주주의”, 참여사회연구소 편, 『참여민주주의와 한국사회』, 서울 : 창작과 비평사, 1997, pp.17~20.

44) Ibid., p.38.

45) Ibid., p.40.

46) 마틴 카노이, 이재석 외 역, 『국가와 정치이론』, 서울 : 한울, 1992, p.28.

깔려있다는 사실이다. 원래 민주주의라는 말의 의미는 정의상(by definition) 시민이 ‘주인’이라는 것이다. 봉건영주나 절대군주에게 소유권이 집중되어 있었던 것에 반발하면서 시민이 국가의 ‘주인’이라는 사상이 생겨났고, 이러한 사상으로부터 근대 민주주의가 시작된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정부의 의사결정과정에 주인으로서 시민이 참여하는 것은 정당한 소유권의 행사로 볼 수 있다. 반면에 이해관계자가 회사경영에 참여하는 것과 같이 소유권을 갖지 못한 분야에 대한 참여는 민주주의의 근본과는 동떨어져 있는 것이다.

근대 사상가 중에서 참여민주주의의 기초를 제공한 사람으로 루소를 든다.⁴⁷⁾ 루소는 재산소유를 사악하고 불평등한 것의 원천으로 간주하면서 시민사회가 대중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부유하고 권력 있는 자들이 만들어 낸 작품이라고 주장하였다.⁴⁸⁾ 루소가 가진 소유권에 대한 부정적인 사상은, 비록 그가 사회주의자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후대의 사회주의에 이념적 단초를 제공하는 데 크게 기여했던 것이다.⁴⁹⁾ 그가 제시한 ‘일반의지’ 사상은 근대 민주주의의 토대가 된 반면, 재산권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현실 사회주의와 그것의 비민주성에 원인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루소의 사상은 모순적이라고 할 만하다.

참여연대가 주장하고 있는 참여민주주의는 어떠한가? 참여민주주의의 맥락에서 재벌총수의 지배를 해소하고 이해관계자에게 책임을 지는 전문경영인 체제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소유권에 대한 명백한 침해가 아닐 수 없다. 참여연대는 참여의 긍정적인 기능(인간성 계발을 촉진한다는 등)을 강조하고 있으나 긍정적인 기능이 있다고 해서 민주주의의 원리에 맞지 않는 것까지 민주주의로 해석하는 것은 오류가 아닐 수 없다. 이처럼 참여민주주의는 소유권에 대한 침해를 포함하고 있으며 참여연대가 이것에 입각하여 제시하고 있는 재벌개혁론 역시 소유권에 대한 명백한 침해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3) 시장경제와 재벌개혁

참여연대는 재벌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재벌체제의 문제점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고 있고 필자도 긍정하느 부분이 있다.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은 해결책을 도출하기 위한 것이고 이미 우리 사회에서 수많은 개혁안들이 제시되고 있다. 그런데 자본주의체제하에서 민간기업인 재벌을 개혁한다면, 그 방법은 시장경제의 테두리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당연한 일일 것이다. 물론 한국의 재벌이 성장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한 것이 정부이므로 재벌개혁 역시 정부에 의해서 주도되어야 한다고 주장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

47) C. 페이트만, 이유동 역, “참여민주주의”, 한국정치연구회 사상분과 편, 『현대민주주의론 II』, 서울 : 창작과 비평사, 1996, pp.121-128

48) 마틴 카노이, *op. cit.*, pp.29-30.

49) 노병철 외, *op. cit.*, p.230.

려나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정부가 재벌개혁을 주도한다고 할 때, 재벌에 대한 직접적인 압력을 행사할 것이냐, 아니면 재벌이 따를 수밖에 없는 환경적 조건을 마련할 것이냐 하는 점이다. 자본주의적 방식은 바로 후자에 해당하는 것이다. 정부의 직접적인 계획과 그에 따른 시장 개입은 ‘치명적 자만’이라는 하이에크의 교훈⁵⁰⁾을 생각할 때 전자의 해법은 분명히 자본주의적이지 못하다.

참여연대의 재벌개혁론을 살펴보면 소유와 지배구조로부터 시작해서, 금융개혁, 공정거래 개혁 등의 목표가 재벌개혁에 맞춰져 있을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재벌은 해체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떤 방법으로 하자는 것일까?

참여연대의 재벌개혁론에서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는 사실은 시장원리에 의한 해법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김대환은 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재벌개혁은 정부나 정치권에만 맡겨 두어서 될 일이 아니다. 시장에 맡겨 두는 것은 더구나 안된다. 한편으로는 과거와는 다른 정책적 대응이 요구되며, 다른 한편으로는 이를 촉구함과 동시에 국민이 주체적으로 나서는 운동적 대응이 절실히 요청된다.”⁵¹⁾

김대환의 주장은 재벌개혁이 시장경제원리를 통해서 이뤄질 수 없으므로 사회운동을 통해서 정부에게 압력을 행사하는 동시에 재벌에 대해서 직접적인 압력을 행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입장은 참여연대 재벌개혁론의 전편에서 나타나고 있다.

사실 재벌개혁론이 본격적으로 제기된 것은 IMF 외환위기가 발생하면서부터였다. 이 시기에 재벌에 대한 개혁방향은 위기의 성격상 국제기구인 IMF의 처방을 존중하는 범위 내에서 조정될 수밖에 없었다.

참여연대는 IMF가 제시한 개혁안과 그것을 반영한 김대중 정부의 재벌개혁 정책을 ‘시장주의적 해법’이라고 부르면서 비판하고 있다.⁵²⁾ 즉 현 정권의 재벌개혁방법론은 기본적으로 재벌을 시장의 울타리 속에 가두어 시장의 힘으로 재벌개혁을 달성한다는 시장주의적 해법인데, 이러한 방식은 위기 상황에서 그 사회적 비용이 엄청날 수밖에 없으며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도 지금이 불확실하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정부의 시장주의적 해법은 재벌이 저지른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정리해고제를 수용한 노동자나 ‘금모으기 운동’에 참여한 일반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 인식과도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이러한 시장주의적 해법은 미국식 자본주의를 한국에 이식하려는 것으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주장한다.⁵³⁾ 미국식 자본주의가 개인의 사회적 삶을 구성하는 다양

50) F. A. 하이에크, *op. cit.*

51) 김대환a, *op. cit.*, p.16.

52) 김균, “재벌개혁과 한국 자본주의의 방향”, 참여연대 참여사회연구소 기획, 김대환·김균 공편, 『한국재벌개혁론』, 서울 : 나남출판사, 1999, pp. 175-176.

하고 풍부한 사회적 가치체계를 경제적 가치체계 하나로 환원시켜버리는 맹목적인 물질주의라는 점은 그 자체의 효율성의 근원이자 한계라고 한다. 따라서 시장형태가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미국식 자본주의를 유일하고 보편적인 시장경제형태로 보는 것은 편협하고 잘못된 관점이며 우리 스스로 선택의 여지를 제한하는 오류라는 것이다.

경제위기 상황에서 무조건 시장경제원리만을 강조하는 것이 사회적 비용을 수반할 수 있다는 주장은 단기적으로 볼 때 타당한 면이 없지 않다. 그리고 시장의 형태는 다양하며 미국식만이 보편적 시장형태가 아니라는 것도 맞는 말이다. 따라서 참여연대가 경제위기 상황에서 시장경제원리의 예외를 요구하고 미국식이 아닌 다른 모델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만을 가지고 반시장경제적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시장경제의 예외를 적용하면서 달성하고자 하는, 미국식이 아닌 다른 모델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하는 점이다. 김균은 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공동체적 평등성 내지는 사회적 연대성이 물질적 성장추구와 함께 보장되는 민주주의적 시민사회가, 특히 민주화 과정 이후 우리 사회 내부에서 형성된 최소한의 공감 영역일 것이다. 따라서 현시점에서 한국 사회가 새로이 탐색해야 하는 경제발전 모형 역시 이러한 사회적 연대성이 내재화되어 있는 시장형태여야 할 것이다”⁵⁴⁾

김균은 지금 사회적 연대라는 개념을 시장에 적용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시장이 사회적 협동을 가져온다고 할 때의 ‘협동’과 김균이 말하고 있는 사회적 ‘연대’는 분명히 다른 것이다. 시장의 협동은 개별적 이윤추구와 관련되어 있는 반면, 사회적 연대는 공동체적 이타심과 관련된 개념이기 때문이다.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른 가격형성이 공동체적 이타심에 의존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김균이 말하는 연대성은 시장경제원리와 논리적으로 상충되는 개념이다. 따라서 김균이 말하는 “사회적 연대성이 내재화되어 있는 시장”이라는 개념은 범주상의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런 오류는 상당히 흔한 것이어서 예를 들면 기독교적 행동지침들이 경제문제에도 적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들 수 있다.⁵⁵⁾ 그러나 자기희생과 같은 기독교적 윤리가 시장에서 어떻게 그 모습을 드러낼 수 있을까를 생각해보면 그러한 주장이 얼마나 불합리한 것인지를 쉽게 알 수 있다. 물론 회사의 구성원들이나 고용인들 사이에는 상당한 정도의 겸허와 자비가 있을 수 있으며 심지어 자기희생도 가능하다. 예를 들어 자신이 승진하여 차지하고 싶었던 자리에 친구가 앉도록 도와줄 수도 있다. 하지만 회사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도 그 자체를 시장행위에 결합시킬 수는 없다. 더욱이 시장은 전체 사회의 일부분에 불과하며

53) *Ibid.*, pp.177-179.

54) *Ibid.*, p.179.

55) 해리 버로우즈 액튼, 이종욱·유주현 역, 『시장의 도덕』, 서울 : 자유기업원, 1997, pp.72-75.

시장 외의 영역은 얼마든지 있으므로⁵⁶⁾ 사회적 연대를 발휘할 수 있는 공간은 충분히 있는 것이다. 인간의 다양한 가치를 물질주의로 환원시킨다는 비난을 받고 있는 미국에서조차 그러한 사회적 연대의 공간은 적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시장원리와 상충되는 사회적 연대라는 개념을 시장에 결합시키려는 시도는 분명히 반시장경제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반시장경제적인 태도는 참여연대 재벌개혁론의 전편을 흐르고 있다. 재벌의 소유·경영 분리도 시장원칙에 의해서만으로는 안되며,⁵⁷⁾ 금융시장의 개혁 역시 시장주의적인 방법으로는 안되고,⁵⁸⁾ 공정거래법 개혁 역시 지금 당장은 시장주의적 방법으로 해서는 안된다.⁵⁹⁾ 또한 궁극적으로 재벌은 해체되어야 하는데, 이 역시 시장경제원리에 의해서 비효율적인 재벌체제가 도태되는 방식이 아니라 사회운동의 개입과 추동으로 추구되어야 하며 더 나아가 일본식으로 정부가 주도해서 재벌을 해체해야 한다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⁶⁰⁾

물론 참여연대의 재벌개혁론을 살펴보면 적어도 명목상으로는 시장을 부정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한다. 그러나 참여연대가 말하는 시장에는 반드시 단서가 붙는다. ‘공정’, ‘인간의 얼굴’, ‘민주적’, ‘지금 당장은’, ‘운명적’ 등등이 그러한 단서들이다. 뿐만 아니라 재벌개혁이 시장원리를 통해 이뤄져서는 안된다고 하는 이유 역시 다양하다. 경제위기, 산업공동화, 노동자와 서민층의 피해 등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참여연대가 추구하는 재벌개혁은 단순히 상황논리에 의해 시장의 예외를 인정하자는 차원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시장경제와 상치되는 지점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반시장경제적이라고 할 수 있다.

(4) 이윤추구와 재벌개혁

자본주의에서는 개인의 이윤추구를 인정할 뿐만 아니라 긍정적인 것으로 생각한다. 시장에서의 이윤추구는 결과적으로 사회적 협동을 가져오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윤추구는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이뤄져야 하며 그러한 절차를 통해서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다.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가리지 않고 이윤추구를 할 수 있으며, 정당한 방법을 통해서라면 비난 받을 이유가 없다.

56) *Ibid.*, p.64.

57) 김기원, *op. cit.*

58) 김상조, “재벌개혁을 위한 금융개혁의 방향과 과제”, 참여연대 참여사회연구소 기획, 김대환·김균 공편, 『한국재벌개혁론』(서울: 나남출판사). 김상조는 시장주의적 금융개혁을 ‘앵글로색슨식 해법’이라고 부르고 있다.

59) 김주영, “김대중 정부 초기의 공정거래정책과 재벌개혁”, 참여연대 참여사회연구소 기획, 김대환·김균 공편, 『한국재벌개혁론』, 서울: 나남출판사, 1999.

60) 김대환, *op. cit.* p.30.; 권혁태, “일본의 재벌해체와 기업집단”, 참여연대 참여사회연구소 기획, 김대환·김균 공편, 『한국재벌개혁론』, 서울: 나남출판사, 1999.

참여연대의 이윤추구에 대한 입장을 보면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이 재벌의 이윤추구를 대단히 부정적으로 본다는 사실이다.

참여연대는 재벌이 국민경제에서 독점적 지위를 확보함에 따라 중소기업과 소비자를 대상으로 초과이윤을 획득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재희는 한국 재벌의 독점적 지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⁶¹⁾ 한국의 재벌은 1970년대까지는 주로 제도적인 요인에 의해서 생산물시장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형성하고 유지했다고 한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 수입자유화율이 높아지면서 대외 보호장벽은 제거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벌은 여전히 국내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데, 그러한 지위의 원천은 기술력의 독점이라고 한다. 실제로 1980년대부터 한국 재벌의 자체 기술능력이 확충되기 시작했는데, 기술연구소 설립이 본격화되었고, 연구개발투자와 연구인력 확충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러한 기술강화의 노력은 상위 재벌로 갈수록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으며 기술력의 독점은 상위 재벌로 하여금 독점적 지위를 강화시키는 기본적인 요소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

참여연대가 문제로 삼고 있는 재벌의 경제력집중, 즉 국내시장에서의 독과점적 지위는(적어도 현재의 상위재벌에 있어서는) 기술력의 우위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것을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기술력은 재벌기업의 자체적인 노력에 의해서 이뤄진 것이고, 그러한 노력에 의해서 소비자로부터 더 많은 선택을 받게 됨에 따라 시장에서의 점유율이 높아진 것이다. 정부의 보호가 아닌 자체의 기술력에 의해서 시장에서 높은 점유율과 많은 이윤을 획득하는 것이 비난받아야 할 이유는 없다. 이것은 정당한 방법에 의해서 이윤추구를 한 결과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여연대는 이것을 기술력 독점이라고 하면서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재희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특히 날로 심화되고 있는 소수 상위 재벌의 경제력집중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지금까지의 재벌정책은 주로 30대 재벌을 대상으로 포괄하는 것이었지만, 향후 상위 5대 재벌에 대한 선별적 정책수단들이 강구되어야 한다.”⁶²⁾

참여연대가 요구하는 재벌의 경제력집중 해소는 이렇듯 부당한 방법에 의한 경제력집중만을 문제삼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방법에 의한 것까지도 규제해야 한다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김주영의 다음과 같은 주장은 참여연대의 이러한 태도를 좀더 분명하게 보여준다.

“(공정거래법의 부당 내부거래 규제는) 모든 내부거래에 있어서 부당성을 규제의 요건으로 삼음으로써 단순히 내부거래에 따른 지원의 규모가 크다는 이유만으로는 문제삼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 내부거래는 그 조건이 비록 적정하다 하더라도 그 규모가 큰 경우 경쟁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계열사간 선단식 경영을 야기하는 문제가 있는데 부당성 요건 때문

61) 이재희, *op. cit.* pp.59-62.

62) *Ibid.*, p.63.

에 규모만 가지고는 문제삼기 어려워지는 것이다.”⁶³⁾

김주영은 지금 적법절차에 의한 내부거래라도 규모가 커지면 경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부당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⁶⁴⁾ 이렇듯 참여연대의 재벌개혁론에는 정당한 방법을 통한 이윤추구도 대기업이 하면 (또는 규모가 커지면) 규제되어야 한다는 논리가 들어있는 것이다. 이러한 논리는 소위 ‘국민정서법’에는 부합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정당한 방법을 통해서라면 누구나 이윤추구를 할 수 있다’는 자본주의의 원칙에는 위배되는 것이다.

반면에 참여연대는 재벌이 아닌 집단의 이윤추구는 적극적으로 옹호할 뿐만 아니라 그 방법이 특혜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문제될 것이 없다는 태도를 보여준다. 김상조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금융자율화는 모든 정책금융의 폐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물론 재벌에 대한 특혜금융은 폐지되어야 한다. 그러나 중소기업금융, 기술개발금융, 주택금융, 환경개발금융, 낙후지역금융 등의 특수목적에 위한 정책금융은 여전히 필요하며, 그 효과가 특정기업, 특정산업에 한정되지 않는다면 WTO 체제하의 금지보조금 조항에도 저촉되지 않는다. ... 그 실행기관은 당연히 정부 소유의 은행이어야 한다. 따라서 특수목적의 정책금융 담당 은행은 민영화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⁶⁵⁾

과거 재벌의 성장과정에서 정부가 국책은행을 통해 정책금융을 지원하고, 재벌은 그 반대급부로 정치자금을 제공하면서 상당한 이윤을 취했던 것을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는 참여연대가 재벌이 아닌 다른 집단에 대해서는 정부가 특혜금융을 지원해 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필자는 참여연대가 과거에 특혜금융을 고리로 재벌과 정부간에 있었던 유착현상이 중소기업과 같은 다른 부문에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있어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인지 의문스럽다. 참여연대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든지간에 변함없는 사실은 정경유착 현상은 재벌부문에서만 있었던 것이 아니며 중소기업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정부의 개입이 있는 한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으며 실제로 그러해 왔다는 점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참여연대는 정당한 방법이라고 할지라도 재벌이 이윤추구를 하는 것은 규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재벌이 아닌 집단이 이윤추구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특혜를 줘서라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태도는 자본주의의 이윤추구

63) 김주영, *op. cit.*, pp.279-280.

64) 여기서 김주영이 말하는 경쟁은 시장경쟁이 아니다. 그것은 “약자에 대한 보호”를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그런 문제는 공정거래법에서 다룰 문제가 아니라 사회보장법에서 다루어야 할 문제일 것이다.

65) 김상조, *op. cit.*, p.258.

원칙, 즉 정당한 방법을 통해서라면 누구라도 이윤추구를 할 수 있다는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 아닐 수 없다.

이상에서 자본주의의 기본 원칙 즉 소유권 인정, 시장경제 채택, 사적 이윤추구 인정이라는 세 가지 원칙을 기준으로 참여연대의 입장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참여연대의 재벌개혁론은 자본주의의 세 가지 기본원칙에서 동떨어진 것으로 보여진다. 이는 참여연대의 재벌개혁론이 반(反)자본주의적이라고 볼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바로 이 점에서 참여연대가 시장을 ‘운명적’으로 전제할 수밖에 없다고 말하는 것⁶⁶⁾이 결국에는 ‘허위의식’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은 ‘운명적’인 듯하다. 이제 참여연대가 제기하는 재벌개혁론의 이데올로기성을 살펴볼 차례가 되었다.

3. 참여연대 재벌개혁론의 이데올로기성

이데올로기의 개념을 살펴보면서 이데올로기의 특징이 첫째, 계급이익을 추구한다는 점, 둘째, 은폐와 대체의 기능을 한다는 점(허위의식), 셋째, 행동지향적이라는 점이라는 것을 밝힌 바 있다. 이러한 특징들을 기준으로 참여연대의 재벌개혁론이 가지고 있는 이데올로기성을 밝혀보자.

(1) 계급이익

자본주의 사회에서 계급구분이라고 하면 주로 노동자와 자본가를 연상하게 된다. 그러나 노-자간의 계급구분은 산업사회의 전형적인 특징을 반영한 것이며 노-자 구분이 계급구분의 전부는 아니다. 사실 사회계급의 구분은 ‘가진 자’와 ‘못가진 자’로 나누는 것이 더욱 전형적이다. 우리나라의 진보적 학계에서는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으로 구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마르크스는 산업사회의 계급구분을 부르주아와 프롤레타리아로 나누면서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가 실제로는 부르주아의 계급이익을 옹호하면서도, 이를 은폐하여 보편적 이익으로 위장하는 허위의식이라고 주장했다. 반면에 이에 대항하는 프롤레타리아는 무계급적 계급으로서 보편성을 갖기 때문에⁶⁷⁾ 이들의 계급의식은 이데올로기가 아니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만하임에 의해서 이러한 인식은 극복되었는데, 그에 따르면 모든 집단의 사유는 사회관계를 반영하며 프롤레타리아 계급의식도 부르주아 계급의식과 마찬가지로 이데올로기라는 것이

66) 김균, *op. cit.*, pp.178-179.

67) 오문환, “시민사회의 사상 - 시민정부, 부르주아, 공공영역”, 이신행 외, 『시민사회운동 - 이론적 배경과 국제적 사례』, 서울 : 법문사, 1999, p.27.

다.

그렇다면 참여연대는 특정한 계급이익을 추구하는가? 아니면 보편적 이익을 추구하는가? 참여연대의 문건을 살펴보면 참여연대가 노동자와 민중의 입장을 상당히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참여연대의 집행위원장인 조희연은 참여연대의 성격을 분석하면서 참여연대가 시민운동이기는 하지만 친노동운동 혹은 친민중운동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 80년대 말 시민운동의 반민중운동 혹은 비민중운동적 지향을 비판하면서 출발했기 때문에 친민중운동 혹은 친노동운동적 성격을 지향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 (참여연대와 같은) 진보적 시민운동은 노동운동에 의해 포괄되지 않는 다양한 이슈들을 끌어안고 대결함으로써 노동운동과 보완관계에 설 수 있다고 생각된다.”⁶⁸⁾

이러한 주장은 조희연에게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다. 참여연대의 협동처장인 김호기는 참여연대와 노동운동이 강력하게 연대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으며,⁶⁹⁾ 운영위원인 유팔무는 참여연대와 같이 ‘새로운 형태의 시민운동’을 지향하는 경우는 시민운동의 이슈와 방법을 민중적·변혁적인 지향과 결합시키고 있다⁷⁰⁾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노동운동과 참여연대의 관련성은 노동운동 측에서도 언급되는데, 채운석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은 “앞으로 참여연대가 시민운동의 순수성을 지켜나가면서 노동자와의 연대수준을 높여 노동자를 사회의 주인으로 만드는 사회개혁과 진보의 길에 계속 함께 하기를 기대한다”⁷¹⁾고 말하고 있다. 이상의 주장들을 통해서 참여연대가 노동자 내지는 민중의 계급적 이익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물론 참여연대와 같은 시민단체가 시민의 일부인 노동자의 이익에 무관심해야 할 이유는 없으므로 노동자의 이익에 관심을 갖고 노동운동과 연대를 주장한다고 해서 노동자계급의 이익만을 추구한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노동운동의 이익과 일반 시민의 이익이 상충하는 경우에 참여연대가 어떤 태도를 취했는가를 살펴보면 참여연대가 사회전체의 이익을 추구하는 범위 내에서 노동자계급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인지, 아니면 노동자계급의 특수한 이익을 추구하는 것인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지난 1999년에 서울시 지하철 노조가 구조조정 방침에 반발하여 파업을 벌였을 때 YMCA와 과소비추방범국민운동본부 등 40개 종교·소비자단체의 연대기구인 시민연대회의

68) 조희연, “참여연대 5년의 성찰과 전망”, 참여연대 5주년 기념 심포지움, 「한국의 시민운동, 21세기의 대안을 찾아」, 발표 논문, p.39. 1999.

69) 김호기, “한국시민운동의 반성과 전망”, 참여사회연구소 신년정책포럼, 「한국시민운동의 성과와 한계, 그리고 전망」, 발표논문, 2001.

70) 유팔무, “시민사회의 성장과 시민운동”, 유팔무·김호기 편, 『시민사회와 시민운동』, 서울: 한울, 1995, p.383

71) 참여연대 창립 5주년 기념 자료, 〈시민속으로〉, 1994.

가 시민의 피해를 이유로 지하철 파업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한 적이 있다. 당시 YMCA의 신종원 시민사회개발부장은 “노조는 여론을 겸허하게 수용해 파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면서 “시민단체들도 이제는 명분 없는 파업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⁷²⁾

그러나 참여연대는 노조측의 파업중단보다는 노사양측의 성실한 협상진행을 요구했다. 참여연대의 김기식 정책실장은 “일방적인 구조조정을 추진하려는 서울시나 단 1명의 정리해고도 있을 수 없다는 노조의 주장 모두 문제가 있다”는 양비론적인 입장을 취하면서 노·사·정·시민단체가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것을 요구했다.⁷³⁾ 뿐만 아니라 비판적인 여론에 밀려서 지하철 노조가 파업을 철회한 다음에는 “정리해고가 노동자의 생존권 문제와 직결되어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지하철 노조가 파업을 철회한 것은 참으로 어려운 결정이 아닐 수 없다”고 하면서 “노조원에 대한 징계철회, 또는 최소화의 조치 등 이후 처리과정에서 포용적인 자세를 보여줌으로써 대화의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⁷⁴⁾고 주장했다.

당시 서울시 지하철 공사는 연간 운영적자가 3,500억 원에 이르고 총누적 부채는 무려 3조 4,923억 원이나 되었다. 그럼에도 방만한 운영으로 98년 감사원 감사결과 과잉인력과 인건비 과다지출이 지적된 상황이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노조는 근무시간을 줄이고 1,400명의 인원을 증원해야 한다고 주장함으로써 시민의 이익과는 배치되는 집단이기주의적 행태를 취했다.⁷⁵⁾ 바로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시민단체들이 노조의 파업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던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참여연대가 노조의 집단이기주의를 변호하는 듯한 자세를 취한 것은 참여연대가 시민의 이익보다는 노동단체의 입장을 우선하고 있다는 의구심이 들게 하는 사례가 아닐 수 없다.

한편 지난 2000년 6월에는 정부가 경찰력을 동원해서 롯데호텔의 불법파업을 진압했는데, 이 과정에서 과도한 폭력이 사용되었다는 것이 문제가 되었다. 참여연대는 이에 대해서 “(정부가) ‘집단이기주의 엄단’이라는 명목 아래 선부르고 난폭하게 공권력을 투입해 외국인 투숙객을 공포로 몰아 넣으면서까지 노조의 쟁의를 짓밟은 오늘의 사태를 개탄한다”는 논평을 발표했다.⁷⁶⁾ 물론 경찰의 진압 과정이 필요 이상으로 폭력적이었다면 이에 대한 문제제기는 정당한 것이다. 그러나 노조가 벌인 파업의 불법성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현행 노동관계법이 과거 군사독재 시절과 같이 원천적으로 잘못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롯데호텔 노조가 불법적인 방법으로 파업을 벌인 것은 정당

72) 문화일보, 1999. 4. 20.

73) 문화일보, 1999. 4. 20.

74) 참여연대, 〈개혁통신〉 1999. 4. 29.

75) 대한매일, 1999. 4. 13.

76) 참여연대 논평, 2000. 6. 29.

화될 수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여연대가 노조 파업의 불법성에 대해서 침묵하는 것은 노동운동에 관해서 균형된 입장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다.⁷⁷⁾

이상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참여연대가 노동운동 세력의 계급이익을 우선적으로 추구하고 있다는 점이다. 마르크스의 관점에서 보면 노동계급의 이익은 보편적 성격을 갖는 것이므로 참여연대의 이러한 입장이 이데올로기가 아니라고 할 수 있겠지만, 만하임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분명히 하나의 이데올로기인 것이다.

참여연대의 재벌개혁론에서도 계급이익 추구 경향이 드러나고 있다. 재벌해체를 위해서 노동운동 세력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며⁷⁸⁾ 재벌개혁의 주요 목표가 ‘노동자 경영참여’에 있다는 것⁷⁹⁾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이렇게 볼 때 참여연대의 재벌개혁론은 결국 노동자의 계급이익을 추구하는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바로 이점에서 참여연대의 재벌개혁론은 하나의 이데올로기인 것이다.

참여연대가 우리 사회를 자본가와 노동자의 대립으로 나누고 노동자의 계급이익만을 추구하는 것은 아니다. 그 보다는 가진 자와 못가진 자 내지는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을 구분하여 후자의 이익을 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노동자의 계급이익을 추구하는 것도 그런 차원에서 이해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주목해야 할 것은 참여연대의 재벌개혁론에서 재벌·노동자, 재벌·중소기업, 재벌·소비자의 계급구분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재벌의 이익을 위해서 노동자, 중소기업, 소비자가 피해를 입고 있다는 사실이 재벌문제의 핵심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참여연대가 재벌에 대해서 지극히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면서 반자본주의적인 방법까지 동원해서 재벌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피지배계급의 이익을 추구하는 차원인 것이다.⁸⁰⁾ 이러한 태도는 계급을 구분하고 특정계급의 이익을 배타적으로 추구하는 전형적인 이데올로기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77) 참여연대의 입장을 나타낸 자료들 중에서 노동운동을 비판하는 자료를 찾으려고 애를 써보았으나 찾을 수 없었다.

78) 장상환, “재벌해체와 노동운동”, 참여연대 참여사회연구소 기획, 김대환·김균 공편, 『한국재벌개혁론』, 서울: 나남출판사, 1999.

79) 박준식, “노동조합의 경영참여와 노사관계의 발전방향”, 참여사회연구소 편, 『참여민주주의와 한국 사회』, 서울: 창작과 비평사, 1997.

80) 필자는 우리 사회의 노동자, 중소기업, 소비자가 ‘못가진 자’라는 계급규정에 동의할 수 없다. 예를 들어 대기업의 노동자는 결코 약한 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격차로 인해 노동자들이 재벌대기업 취업을 선호하고 있다는 참여연대 자신의 지적(홍장표, *op. cit.*, p.117)에서도 증명되고 있다. 그러나 이 절의 목적은 참여연대의 재벌개혁론이 갖는 이데올로기성을 증명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참여연대의 계급구분에 대한 평가는 생략하기로 한다.

(2) 은폐와 대체 : 허위의식

이데올로기는 특정 계급의 이익을 국가(또는 사회) 전체의 보편적 이익으로 위장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며,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허위의식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다.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참여연대는 사회를 ‘가진 자’와 ‘못가진 자’로 나누고 ‘못가진 자’의 이익을 위해서 활동하고 있다. 그러나 참여연대가 내세우는 명분을 보면 소외된 자, 억압받는 자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하면서도 그러한 배려가 특정 계급의 이익만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이익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참여연대의 창립선언문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소외된 자, 억압받는 자에 대한 무관심은 동료시민으로서의 신성한 의무를 방기하는 태도입니다. … 오랜 산고 끝에 우리는 새로운 사회의 지향점을 ‘참여’와 ‘인권’을 두 개의 축으로 하는 희망의 공동체 건설로 설정했습니다. 우리는 「참여민주사회와 인권을 위한 시민연대(약칭 참여연대)」가 여러 시민들이 함께 모여 다 같이 만들어 가는 공동체의 조그만 밑거름이 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모두가 힘을 합쳐 새로운 시대, 참여와 인권의 시대를 만들어 갑시다.”⁸¹⁾

계급이익의 추구가 ‘참여’와 ‘인권’이 보장되는 ‘희망의 공동체’라는 보편적이고 중립적이며 정당성을 갖는 개념으로 연결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더 나가서 참여연대의 정관에서는 참여연대의 사업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사회 각 분야의 비리와 부정을 고발하여 ‘사회정의’와 ‘공익’을 실현하기 위한 시민행동”이라고 주장한다.⁸²⁾ 이 또한 계급이익의 추구가 ‘사회정의’와 ‘공익’이라는 보편타당한 행동으로 표현되고 있는 것이다.

참여연대의 이러한 입장이 허위의식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참여연대가 추구하는 목표가 소위 말하는 우리 사회의 ‘가진 자(대표적으로는 재벌)’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이다. 재벌의 이익은 기본적으로 정당하지 못한 것이며, 재벌에 의해 억압받는 개인이나 집단의 행동은 기본적으로 정당하다는 전제를 가지고 활동하는 참여연대가 자신의 활동에 대해서 보편적인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은 허위의식에 다름 아니다.

이러한 허위의식은 재벌개혁운동의 대표적인 활동이라고 할 수 있는 소액주주운동에서 명백히 나타난다. 참여연대의 홈페이지에 보면 소액주주운동의 목표가 경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한다.⁸³⁾ 소액주주운동을 통해서 경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달성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지만, 그 목표 자체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런데 참여연대의 집행위원장인 조희연은 참여연대 창립 5주년 기념 심포지엄에서 발표한 논문을

81) 참여연대, 〈창립선언문〉, <http://peoplepower21.org>

82) 참여연대, 〈정관〉 제4조 4항, <http://peoplepower21.org>

83) 참여연대 홈페이지, <http://peoplepower21.org>

통해 소액주주운동에 대해서 전혀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현 국면은 ‘기동전’적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본질론적 비판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투쟁만을 중심으로 보게 되면, 현재의 자본지배에 대한 저항의 통로를 협소화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소액주주운동은) 본질론적 한계를 고려하면서도, 현재는 재벌을 포함한 경제권력에 대한 민(民)의 저항의 ‘다양한’ 행동수단의 하나로 인식될 수 있다고 본다. … 소액주주운동은 자본주의라는 현실 속에서 자본을 통제하는 민의 활동의 한 측면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 … 소액주주운동이 소액주주들의 권익옹호운동으로서의 성격이 주된 것으로 되어갈 때, 소액주주운동은 본질적인 선택을 요구받게 될 것으로 판단된다.”⁸⁴⁾

조희연의 주장에서는 참여연대가 내세우는 소액주주운동의 중립적인 목표는 사라져버리고 계급운동의 한 수단으로서의 소액주주운동이라는 개념이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조희연의 이런 주장에 대해서 필자가 언론을 통해 비판을 하였고, 이에 대해서 조희연은 소액주주운동을 주도했던 참여연대 경제민주화위원장 장하성에게 이를 해명하는 편지를 보냈다. 장하성은 답신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조 교수님의 지적은 조금도 문제될 소지가 없습니다. … 조교수께서 지적하신대로 ‘소액주주운동이 소액주주들의 권익옹호 운동으로서의 성격이 주된 것으로 되어갈 때, 소액주주운동은 본질적 선택을 요구받게 될 것으로 판단된다’는 지적도 참여연대 경제민주화위원회에 맞는 말입니다.”⁸⁵⁾

이 편지를 보면 장하성은 조희연이 주장한 바, 계급운동으로서의 소액주주운동이라는 개념에 동의하거나 적어도 반대하지는 않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참여연대의 홈페이지에는 소액주주운동의 목표가 매우 중립적이고 보편타당한 것으로 제시되어 있을 뿐 계급운동의 개념은 찾아볼 수 없다. 이것은 허위의식, 즉 은폐와 대체의 전형적인 사례로 보여진다.

참여연대의 재벌개혁론 자체에서도 이러한 허위의식은 쉽게 발견된다. 그 중 하나가 재벌에 대한 문제의식이다. 모든 문제의 원인을 제공하는 것이 바로 재벌이며, 재벌개혁 없이 경제개혁은 있을 수 없다는 논리가 재벌개혁론의 전편에 흐르고 있다.

그런데 한 가지 신중하게 생각해 봐야 할 것은 한국경제에 있어서 재벌은 독립변수가 아니라 종속변수였다는 점이다. 이러한 사실은 참여연대도 알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재희는

84) 조희연, *op. cit.*, p.43. 이 주장은 진보진영에서 “소액주주운동이 가진 자를 위한 운동”이라는 등의 비판이 제기되는 것에 대한 답변으로 나온 것이다. 여기서 조희연이 말하고 있는 소액주주운동에 대한 “본질론적인 비판”이라는 것은 “가진 자를 위한 운동으로서의 소액주주운동”이라는 등의 비판을 의미한다.

85) 조희연 개인홈페이지, <http://dnsm.skhu.ac.kr>, 조희연과 장하성이 나눈 편지가 조희연의 개인 홈페이지에 게재되었다.

노태우 대통령의 뇌물수수사건에서 노씨에게 뇌물을 준 35명의 기업인에는 주요 재벌 총수들이 망라되어 있는데, 이 뇌물들은 정부 발주의 신규공사나 신규사업 허가 등에 대한 청탁이나 그에 대한 사례로서 제공된 것 외에, 특정한 목적 없이 경영상의 불이익이나 차별을 당하지 않기 위해 제공된 것이 상당수에 이르고 있어 이 시기까지도 “재벌의 흥망이 정치권력에 좌우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하고 있다.⁸⁶⁾ 바로 이것이 문제다. 재벌이 부당한 이득을 취하거나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기 위해서 정치권에 뇌물을 가져다 준 것이라면 문제의 근원은 재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정치권력에게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정부가 각종 인허가권을 가지고 기업에 대한 특혜나 규제를 베풀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기업이 정경유착을 시도할 이유 자체가 사라지기 때문이다.

금융문제에서도 마찬가지다. 김상조는 우리나라 은행의 경우에는 은행이 독자적으로 기업, 특히 재벌의 경영에 대해 사전적 감시기능을 수행한 바도 없었고, 그 경영실패에 대해서 사후적 제재를 가한 적도 없었다고 하면서, “은행은 정부의 지시에 따라 재벌의 이익에 충실히 복무하였을 뿐이다”고 지적하고 있다.⁸⁷⁾ 맞는 말이다. 재벌의 무분별한 차입과 그로 인한 은행과 기업의 동반 위기는 결국 은행이 정부의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에 생겨난 일이었던 것이다. 은행이 민영화되어 상업적인 인센티브에 따라 움직였다면 부실한 기업에게 막대한 자금을 지원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참여연대는 이러한 사정을 잘 알면서도, 문제의 ‘원인’을 재벌에게로 돌리고 있다. 참여연대의 재벌개혁론에서는 정부가 시장에서 손을 떼야 한다는 주장은 찾아볼 수 없다. 모든 것이 재벌의 책임이므로 정치적으로, 사회운동으로 재벌을 개혁(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이다. 이러한 재벌책임론은 인과관계를 뒤집은 것으로 명백한 허위의식이 아닐 수 없다. 마르크스가 독일의 관념철학을 이데올로기라고 규정한 것은, 의식은 본질적으로 사회관계의 산물인데도 불구하고 관념론자들이 의식의 산물로서 사회관계를 말하고 있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즉 인과관계를 뒤집어 놓았기 때문에 허위의식이라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참여연대의 재벌개혁론 역시 인과관계를 뒤집어 놓은 것이므로 허위의식으로서 이데올로기가 아닐 수 없다.

(3) 행동지향성

이데올로기의 긍정적인 의미를 찾는 사람은 그것이 사람들로 하여금 결단하게 하며 행동하도록 한다는 점을 들고 있다는 것을 앞에서 살펴본 바 있다. 이러한 행동지향성은 장점(또는 단점)이기 이전에 이데올로기의 본질적인 특징에 해당된다.

86) 이재희, *op. cit.*, p.51.

87) 김상조, *op. cit.*, p.238.

참여연대의 재벌개혁론은 논의 수준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다. 논평과 성명 발표, 소송제기, 시위, 기자회견, 국회의원에 대한 설득, 주주총회 참석, 기관투자가에게 협조 요청 등등 다방면에 걸쳐서 활동하고 있다. 시민단체 중에서 참여연대만큼 직접 행동에 열의를 보이는 단체는 없다.

최근에 삼성그룹이 공정거래위원회의 부당지원행위 조사를 방해했다는 YTN의 뉴스보도가 나왔다. 이에 대해서 참여연대가 벌인 행동을 보면 참여연대의 행동지향성이 얼마나 강한지를 충분히 알 수 있다.

먼저 뉴스보도가 나온 직후 곧바로 삼성그룹을 비난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삼성그룹 사옥 앞에서 매일 1인 시위를 계속했다. 이어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삼성의 구조조정본부 관계자를 고발하고 을지로에서 삼성그룹을 비난하는 집회를 개최했다. 그리고 나서 공정거래위원회에 삼성을 검찰에 고발해 줄 것을 촉구하는 공문을 보내고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1인 시위를 계속하기로 했다. 참여연대 홈페이지에는 1인 시위 참가자를 모집하는 공고문을 게재했는데, 그 내용을 옮겨보면 <표 1>과 같다.

<표 1> 참여연대 홈페이지 게재 1인 시위 참가자 모집 공고문⁸⁸⁾

- 공 지 사 항 -

제 목 : 삼성그룹 규탄 1인시위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글쓴이 : 경제개혁센터

작성일 : 2001년 11월 26일

삼성그룹이 공정거래위원회의 부당지원행위조사를 방해하기 위해 관련 자료를 조작하고 거짓진술을 하는 등의 조직적인 행동을 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동안 재벌개혁을 위해 노력해온 참여연대는 삼성그룹의 이런 행태를 규탄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재조사 등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전개합니다.

비록 추운 날씨지만, 회원과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일시 : 11월26일부터 공정위의 재조사가 이루어질 때까지,
매일 오전 11시 30분부터 1시간 동안

장소 : 삼성그룹 본사 앞(서울 중구 태평로 소재, 남대문과 시청 사이)
정부종합청사 앞(서울 종로구 세종로 소재, 광화문 앞)

연락처 : 02-723-****

이메일 : ky****@pspd.org

88) 참여연대 홈페이지, <http://peoplepower21.org>

필자는 삼성그룹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고의적으로 방해했는지 알지 못한다. 그것은 검찰의 조사결과가 나와봐야 확실히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참여연대가 삼성그룹에 대해서 비난행동을 하는 것이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에 대해서도 쉽게 판단할 수 없다. 다만 이 사건을 통해 재벌개혁과 관련하여 참여연대가 얼마나 행동지향적인지를 알 수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한 월간지의 기사에 따르면 참여연대는 1997년부터 2001년까지 약 50여건의 민·형사 소송을 제기했다고 한다.⁸⁹⁾ 이 중에 상당부분이 재벌기업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음은 물론이다. 이렇게 볼 때 참여연대의 재벌개혁론은 논의수준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며, 직접적인 행동을 강하게 지향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강력한 행동 지향성은 이데올로기의 본질적인 특징이라는 점에서 참여연대의 재벌개혁론은 이데올로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89) 월간조선 2001년 11월호.

IV. 참여연대 이데올로기 비판

이상을 통해서 참여연대의 재벌개혁론은 반자본주의적이며 이데올로적 성격이 강하다는 것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이데올로기성으로부터 파생되는 문제점은 무엇인지를 살펴보자.

기능주의에서는 이데올로기가 사람들의 행동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하지만 사람의 행동이 언제나 옳은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이데올로기는 본질적으로 왜곡된 인식체계로서 논리적 일관성에서 허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한 인식체계에 의해서 행동이 유도되었을 때 그 행동은 이율배반적일 가능성이 충분하다. 참여연대의 재벌개혁론도 이런 차원에서 우려스러운 점이 있다고 하겠다. 권혁철은 참여연대의 인식에서 나타난 이율배반성을 다음의 사례를 통해서 들고 있다.⁹⁰⁾

1997년 7월 참여연대는 <정부는 기아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성명을 통해 “기아는 … 유일하게 전문경영인에 의해서 운영되고 주식분산이 잘 되어 있는 소유분산 우량기업으로서, … 적극적으로 살려내야 할 기업이다. … 정부는 미국 크라이슬러사의 사례처럼 채무보증 등과 같은 직접적인 재정지원으로 기아를 정상화시켜야 한다. … 기아에 대한 정부지원과 국민주 모집 등의 방식으로 기아를 정상화하기 위한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이 과정에서 기아를 실질적인 국민기업으로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고 촉구했다.

그로부터 1년 후인 1998년 12월에는 현대자동차의 기아자동차 인수와 관련하여 현대중공업이 출자를 한다고 알려지자 참여연대는 <현대중공업의 기아 인수 참여에 관한 입장>을 발표하여 “기아-아시아 자동차의 인수는 주식인수대금 이외에도 6조원에 달하는 부채를 떠안아야 하고, 앞으로 추가로 부채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며, 미래 수익성이 지극히 불투명하며 투자전망이 결코 밝지 않다고 판단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스스로 판단하기에 미래 수익성도 지극히 불투명하고 투자전망도 결코 밝지 않은 기업을 정부의 채무보증 등 직접적인 재정지원과 국민주 모집 등의 방식으로 정상화시킬 것을 촉구하는 명백히 이율배반적인 주장을 했던 것이다. 물론 처음에는 정상화시킬 것을 주장했는데 차후 여러 자료와 정황을 분석해 보니 미래 수익성도 없고 투자 전망도 밝지 않은 것으로 판명되어 현대중공업의 기아자동차 인수에 반대했다고 강변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기아와 관련된 참여연대의 자료 그 어디에도 이러한 태도의 변화에 대한 이유와 근거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

권혁철이 든 사례뿐만이 아니다. 참여연대는 소액주주운동을 통해서 적어도 명분상으로는 소액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활동한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소액주주운동을 하고 있는 참여연

90) 권혁철, “기업과 시민단체 : 협력과 공조의 기반”, 한국비영리학회 2001년 가을 학술대회, 「기업과 NGO의 파트너십」, 발표논문, pp.18-19. 2001.

대가 한편으로는 이동통신요금 인하운동을 강력하게 전개해서 가시적인 성과까지 거두었다. 이동통신요금 인하는 해당기업의 (소액)주주에게 분명히 손해가 된다. 따라서 참여연대는 한편에서는 소액주주운동을 하면서 다른 한편에서는 (소액)주주에게 손해를 미치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이데올로기가 왜곡된 인식체계이며 그것에 입각한 행동이 이윤배반적일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가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왜곡된 인식체계로부터 나타나는 문제점 외에 또 다른 중요한 문제점이 있다. 그것은 편협성이다. 근대 이데올로기는 이분법적 사고에 기초해 있다. 대부분의 이데올로기는 정치적 입장의 차이를 우리와 그들, 즉 친구 아니면 적이라는 흑백의 차이로 규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사고방식은 사회에 존재하는 다양한 의견이나 입장을 무시하고 단순화시키는 경향으로 나타난다. 그들의 동조자들은 전인류의 이익을 위해 투쟁하는 빛의 아들들이고, 그들의 반대자들은 이기적이거나 무지할 뿐만 아니라 소수자의 이익을 위해 공공선을 침해하는 어둠의 자식들이다.⁹¹⁾ 경실련의 사무총장이었던 이석연이 시민단체가 무오류의 환상에 빠져있다고 지적한 것은 이데올로기가 갖는 이러한 문제점을 우려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참여연대가 보여주는 편협성은 이데올로기의 문제점을 그대로 재연한다. 소액주주운동에 대해서 경제관련 단체들이 비판을 제기했을 때 참여연대의 반응은 매우 격렬했다.

자유기업원이 2001년 3월에 참여연대의 소액주주운동을 비판하자 참여연대는 “국가경제를 망친 장본인인 김우중 회장을 필두로 재벌총수 일가의 이익을 대변하면서 국가경제에 해악을 끼쳐온 전경련과 자유기업원은 참여연대와 주주들의 정당한 권리행사에 대해 근거 없는 비난을 하기 이전에 스스로의 존립근거와 역할부터 심각히 재고해야 할 것이다”⁹²⁾는 논평을 발표했다. 이어서 경제5단체가 소액주주운동을 자제해 줄 것을 요청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자 참여연대의 경제민주화위원장인 장하성은 “개가 짖는다고 새벽이 오는 것이 아니다. 닭이 울어야 새벽이 온다”는 발언을 하였다. 뿐만 아니라 필자가 언론을 통해 참여연대를 비판하는 글을 발표하자, 장하성은 조희연에게 보낸 편지를 통해서 필자와 경제단체를 ‘똥개’라고 칭했다.⁹³⁾ 여기서 더 나아가 참여연대는 자유기업원에 대해서 명예훼손을 이유로 손해배상 소송까지 제기했다.

참여연대의 이러한 반응은 노병철이 지적한 근대 이데올로기가 갖는 문제점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참여연대가 경제관련 단체는 물론 소위 신자유주의의 논리에 대해서 이데올로기라고 규정하면서 격렬한 공격을 하는 것은 자신의 논리는 이데올로기

91) 노병철 외, *op. cit.*, p.42.

92) 참여연대, 〈논평〉, 2001. 3. 2.

93) 조희연의 개인홈페이지, <http://dnsm.skhu.ac.kr>

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이러한 태도를 보면서 필자는 마르크스가 부르조아의 논리는 이데올로기라고 비난하면서 노동계급의 논리에 대해서는 이데올로기가 아니라고 옹호한 것을 연상하게 된다.

그러나 만하임이 지적한 대로 모든 사회집단의 사유는 이데올로기적이다. 굳이 만하임의 상대주의를 동원하지 않고 마르크스의 이데올로기 비판 이론을 가지고 분석해 보더라도 참여연대의 재벌개혁론은 이데올로기적 성격을 강하게 가지고 있다. 따라서 참여연대가 자신은 사회공익을 추구하는 반면 자신을 비판하는 사람이나 집단은 ‘사회악’을 추구하는 것이라는 식으로 반응하는 것은 대단히 우려스러운 일이라고 하겠다.

이데올로기는 “나는 옳고 너는 그르다”는 식의 흑백논리를 지향해서는 안된다. 인간의 인식은 무엇이 절대적으로 옳은지를 절대로 알 수 없다는 사실만이 가장 확실한 진리이다. 따라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다양한 사유들이 자유롭게 논쟁을 벌일 수 있는 공간을 충분히 마련해 나가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이데올로기 비판은 인식론적으로, 방법론적으로 자유로운 논쟁을 지향해 나간다”⁹⁴⁾는 하버마스의 이데올로기 비판 이론은 매우 교훈적이다.

94) 한상진, *op. cit.*, p.177.

V. 요약 및 결론

이 논문은 최근 들어 한국 사회에서 중요한 행위자로 등장한 시민단체의 이데올로기를 살펴보고자 하는 목적에서 작성되었다. 시민단체의 이데올로기는 다양한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 이 논문에서는 우리나라의 대표적 시민단체 중 하나인 참여연대의 재벌개혁론이 가지고 있는 이데올로기성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연구문제로 “참여연대의 이데올로기는 무엇인가”를 설정했다.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두 개의 논지(가설)를 설정했다. 첫째, 참여연대의 재벌개혁론은 반(反)자본주의 성향을 보여준다. 둘째, 참여연대 재벌개혁론이 갖는 반자본주의 성향은 이데올로기적 성격을 갖는다.

가설을 증명하기 위해서 먼저 이데올로기와 관련된 이론을 검토하였는데, 여기서는 이데올로기의 개념을 정리하고 그것이 갖는 양가성(ambivalence)을 살펴보았다. 첫째, 이데올로기는 계급이익을 추구하는 신념체계로서 은폐와 대체의 기능을 수행하는 허위의식이며 강력한 행동지향성을 갖는다. 둘째, 이데올로기는 왜곡된 인식체계라는 점에서 부정적 인식의 대상이 되었으나 기능주의적 입장에서는 이데올로기가 인간으로 하여금 결단하고 행동을 할 수 있도록 해 준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기도 한다. 그러나 필자는 모든 행동이 옳은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기능주의의 이데올로기에 대한 긍정론에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였다.

본격적으로 참여연대의 재벌개혁론이 갖는 반자본주의 성향과 그것의 이데올로기성을 밝히기 위해서 참여연대가 재벌개혁과 관련하여 발간한 단행본을 도서관 서베이 방법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이 논문에서 설정한 가설이 증명되었다.

참여연대의 재벌개혁론이 갖는 반자본주의 성향을 증명하기 위해서 먼저 자본주의의 세 가지 기본원칙을 제시했는데, 그것은 소유권 인정, 시장경제 채택, 사적 이윤추구 인정이었다. 참여연대의 재벌개혁론은 첫째, 재벌총수의 소유권을 침해하고 있으며 재벌개혁론이 기반하고 있는 참여민주주의 역시 소유권 침해를 포함하고 있었다. 둘째, 참여연대는 재벌개혁의 수단으로 시장주의적 해법을 사용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으며, 사회적 연대와 같은 시장경제와 상충되는 원리를 시장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었다. 셋째, 참여연대는 재벌총수를 포함해서 ‘가진 자’의 이윤추구에 대해서는 비록 그것이 정당한 방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반대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으며 ‘못가진 자’의 이윤추구에 대해서는 특혜를 주어서라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었다.

이러한 반자본주의적 재벌개혁론은 이데올로기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참여연대는 사회를 재벌·노동자, 재벌·중소기업, 재벌·소비자와 같은 계급으로 구분하고 난

뒤 ‘못가진 자’의 계급이익을 옹호하고 있었다. 둘째, 참여연대는 자신의 계급이익 추구를 사회정의와 공익 추구라는 보편적 가치로 위장하고 있고 소액주주운동의 경우 표면적으로는 기업경영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인다고 하면서도 내부에서는 계급투쟁의 일환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재벌이 경제위기의 원인 제공자라고 주장하여 인과관계를 전도시키고 있었다. 셋째, 참여연대는 재벌개혁을 위해 다양한 수단과 강력한 열의를 동원하여 직접 행동에 나서고 있었다.

이상의 분석을 통해 참여연대 재벌개혁론은 반자본주의적이며 이데올로기성을 갖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이데올로기성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은 참여연대가 재벌문제와 관련하여 인식상의 오류를 보임으로써 이율배반적 자세를 취하고 있다는 것과 자신만이 옳고 자신을 비판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격렬하게 공격하는 편협성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었다. 모든 인간의 사유체계는 이데올로기적이라는 칼 만하임의 통찰을 생각할 때, 이데올로기 비판의 바른 자세는 이데올로기간의 자유로운 논쟁을 허용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 논문은 시민단체의 이데올로기를 분석하기 위한 시론적 작업이었다. 향후 본격적으로 시민단체의 이데올로기 문제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참여연대의 재벌개혁론뿐만 아니라 참여연대의 다양한 활동 전체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더 나가서 참여연대와 다른 시민단체를 비교하여 이데올로기적 유사점과 차이점을 분석하는 작업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연구방법 역시 문헌조사와 함께 내용분석(content analysis) 또는 조사연구(survey research) 방법을 활용한다면 좀더 완벽한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첨언할 것은 참여연대의 재벌개혁론이 가지고 있는 이데올로기성을 비판하고 있는 이 논문 자체가 이데올로기적이라는 반론이 제기될 수 있다는 사실에 관해서이다. 이 논문은 기본적으로 자본주의를 옹호하는 입장에서 작성된 것이므로 마르크스의 관점에서 보면 명백한 하나의 이데올로기일 것이다. 비판의 대상이 되는 참여연대 측에서도 이 논문을 ‘이데올로기적 공격’으로 받아들일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논문이 의도하는 바는 정확하게 말해서 참여연대의 재벌개혁론이 특정계급의 이익을 초월해서 사회전체의 공익을 추구하는 차원인가 아니면 특정계급의 이익을 사회전체의 이익으로 위장하고 있는가를 밝히고자 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이 논문 자체가 이데올로기적 성격을 갖는가하는 문제는 이 논문이 제시하고 있는 명제의 진위를 규명하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더욱이 “이데올로기 비판은 인식론적으로, 방법론적으로 자유로운 논쟁을 지향한다”는 하버마스의 교훈을 생각해 볼 때 이 논문 자체가 이데올로기적인가 그렇지 않은가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중요한 것은 우리 사회에서 이데올로기적 다양성이 인정되는 가운데 자유로운 논쟁과 토론이 전개될 수 있는 분위기일 것이다.

참고문헌

- 고태영, “노동자 파업 관련 언론보도에 나타난 이데올로기 분석 - 1999년 서울 지하철 노조 파업관련 신문보도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9.
- 권혁철, “기업과 시민단체 : 협력과 공조의 기반”, 한국비영리학회 2001년 가을 학술대회, 「기업과 NGO의 파트너십」, 발표논문, 2001.
- 권혁태, “일본의 재벌해체와 기업집단”, 참여연대 참여사회연구소 기획, 김대환·김균 공편, 『한국재벌개혁론』, 서울 : 나남출판사, 1999.
- 김 균, “재벌개혁과 한국 자본주의의 방향”, 참여연대 참여사회연구소 기획, 김대환·김균 공편, 『한국재벌개혁론』, 서울 : 나남출판사, 1999.
- 김기원, “재벌체제의 지양과 책임 전문경영체제의 구축”, 참여연대 참여사회연구소 기획, 김대환·김균 공편, 『한국재벌개혁론』, 서울 : 나남출판사, 1999.
- 김대환a, “재벌문제의 인식과 재벌개혁의 방향”, 참여연대 참여사회연구소 기획, 김대환·김균 공편, 『한국재벌개혁론』, 서울 : 나남출판사, 1999.
- 김대환b, “참여의 철학과 참여민주주의”, 참여사회연구소 편, 『참여민주주의와 한국 사회』, 서울 : 창작과 비평사, 1997.
- 김동운, “한국재벌의 지배구조”, 참여연대 참여사회연구소 기획, 김대환·김균 공편, 『한국재벌개혁론』, 서울 : 나남출판사, 1999.
- 김사철, “기독교계 신문에 나타난 반공 이데올로기 - 통일·북한관련 기사를 중심으로”, 서강대학교 언론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4.
- 김상조, “재벌개혁을 위한 금융개혁의 방향과 과제”, 참여연대 참여사회연구소 기획, 김대환·김균 공편, 『한국재벌개혁론』, 서울 : 나남출판사, 1999.
- 김영래·김혁래, “한국 비정부조직(NGO)의 현황과 과제”, 국회학술회의, 「한국 사회에서 국회와 NGO의 역할」, 발표논문, 1999.
- 김주영, “김대중 정부 초기의 공정거래정책과 재벌개혁”, 참여연대 참여사회연구소 기획, 김대환·김균 공편, 『한국재벌개혁론』, 서울 : 나남출판사, 1999.
- 노병철 외, 『현대 사회와 이데올로기』, 서울 : 인간사랑, 2001.
- 라이만 T. 사전트, 정연식 역, 『현대 정치이데올로기』, 서울 : 이문출판사, 1986.
- 루드비히 폰 미제스, 이지순 역, 『자유주의』, 서울 : 자유기업원, 1997.
- 마틴 카노이, 이재석 외 역, 『국가와 정치이론』, 서울 : 한울, 1992.
- 박준식, “노동조합의 경영참여와 노사관계의 발전방향”, 참여사회연구소 편, 『참여민주주의와 한국 사회』, 서울 : 창작과 비평사, 1997.
- 송호근, 『지식사회학』, 서울 : 나남출판사, 1992.
- 신 율, “한국 시민운동의 개념적 위상과 문제점”, 「한국정치학회보」 제35집 2호, 서울 : 한국정치학회, 2001.
- 오문환, “시민사회의 사상 - 시민정부, 부르조아, 공공영역”, 이신행 외, 『시민사회운동 - 이론적 배경과 국제적 사례』, 서울 : 법문사, 1999.
- 유석춘·김용민, “한국 시민단체의 목적전치 : 경실련과 참여연대를 중심으로”, 「동서연구」, 제12권

- 2호, 서울 :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원, 2000.
- 유팔무, “시민사회의 성장과 시민운동”, 유팔무·김호기 편, 『시민사회와 시민운동』, 서울 : 한울, 1995.
- 이상헌, “한국 환경운동의 이데올로기와 주체와 관한 연구 - 민간환경운동단체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3.
- 이재희, “재벌과 국민경제”, 참여연대 참여사회연구소 기획, 김대환·김균 공편, 『한국재벌개혁론』, 서울 : 나남출판사, 1999.
- 장상환, “재벌해체와 노동운동”, 참여연대 참여사회연구소 기획, 김대환·김균 공편, 『한국재벌개혁론』, 서울 : 나남출판사, 1999.
- 장택원, “정치, 경제적 변동에 따른 신문의 이념적 위상의 변화에 대한 연구 - 1980년대 노사관계 신문사설을 중심으로”, 서강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0.
- 조희연, “참여연대 5년의 성찰과 전망”, 참여연대 5주년 기념 심포지엄, 「한국의 시민운동, 21세기의 대안을 찾아」, 발표논문, 1999.
- 주성수, 『시민사회와 NGO 논쟁』, 서울 : 한양대학교 출판부, 2001.
- 차배근, 『사회과학연구방법』, 서울 : 세영사, 1994.
- 최현철, “재벌의 언론지배와 통제”, 참여연대 참여사회연구소 기획, 김대환·김균 공편, 『한국재벌개혁론』, 서울 : 나남출판사, 1999.
- 한상진, “이데올로기 비판이론의 과제”, 서울대학교 현대사상연구회 편, 『이데올로기와 사회변동』, 서울 : 서울대학교 출판부, 1986.
- 해리 버로우즈 액튼, 이종욱 외 역, 『시장의 도덕』, 서울 : 자유기업원, 1997.
- 홍장표, “재벌과 중소기업”, 참여연대 참여사회연구소 기획, 김대환·김균 공편, 『한국재벌개혁론』, 서울 : 나남출판사, 1999.
- C. 페이트만, 이유동 역, “참여민주주의”, 한국정치연구회 사상분과 편, 『현대민주주의론 II』, 서울 : 창작과 비평사, 1996.
- F. A. 하이에크, 신중섭 역, 『치명적 자만』, 서울 : 자유기업원, 1996.
- K. 만하임, 임석진 역, 『이데올로기와 유토피아』, 서울 : 청아출판사, 2000.

동아일보, 2001. 6. 16.

대한매일, 1999. 4. 13.

문화일보, 1999. 4. 20.

월간조선, 2001. 11.

한국일보, 2001. 11. 2.

조희연 개인홈페이지, <http://dnsm.skhu.ac.kr>

참여연대 홈페이지, <http://peoplepower21.org>

참여연대, <창립선언문>, <http://peoplepower21.org>

참여연대, <정관>, <http://peoplepower21.org>

참여연대(2001), <논평>, 2001. 3. 2.

참여연대(2000), <논평>, 2000. 6. 29.
참여연대(1999), <개혁통신>, 1999. 4. 20.
참여연대(1999), <시민 속으로>, 창립 5주년 기념자료.

참여연대 개혁론 비판

2002년 6월 27일 1판1쇄 발행

2020년 9월 10일 1판2쇄 발행



발행처	자유기업원	발행인	최승노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62길 9 산림비전센터 7층 (07236)		
전화	02-3774-5000	팩스	0502-797-5058

※본 파일은 2002년 발행한 NGO시리즈 NO.3 『참여연대 개혁론 비판』
책을 재편집하여 PDF로 변환한 것입니다.

© 자유기업원, 2020

비매품